

www.peaceone.org

평화누리 통일누리

2017년 11,12월 Vol.170

트럼프 방한과 한미정상회담 대응

삼보일배 평화기도에 나서며
한미 공동언론발표문 구된 노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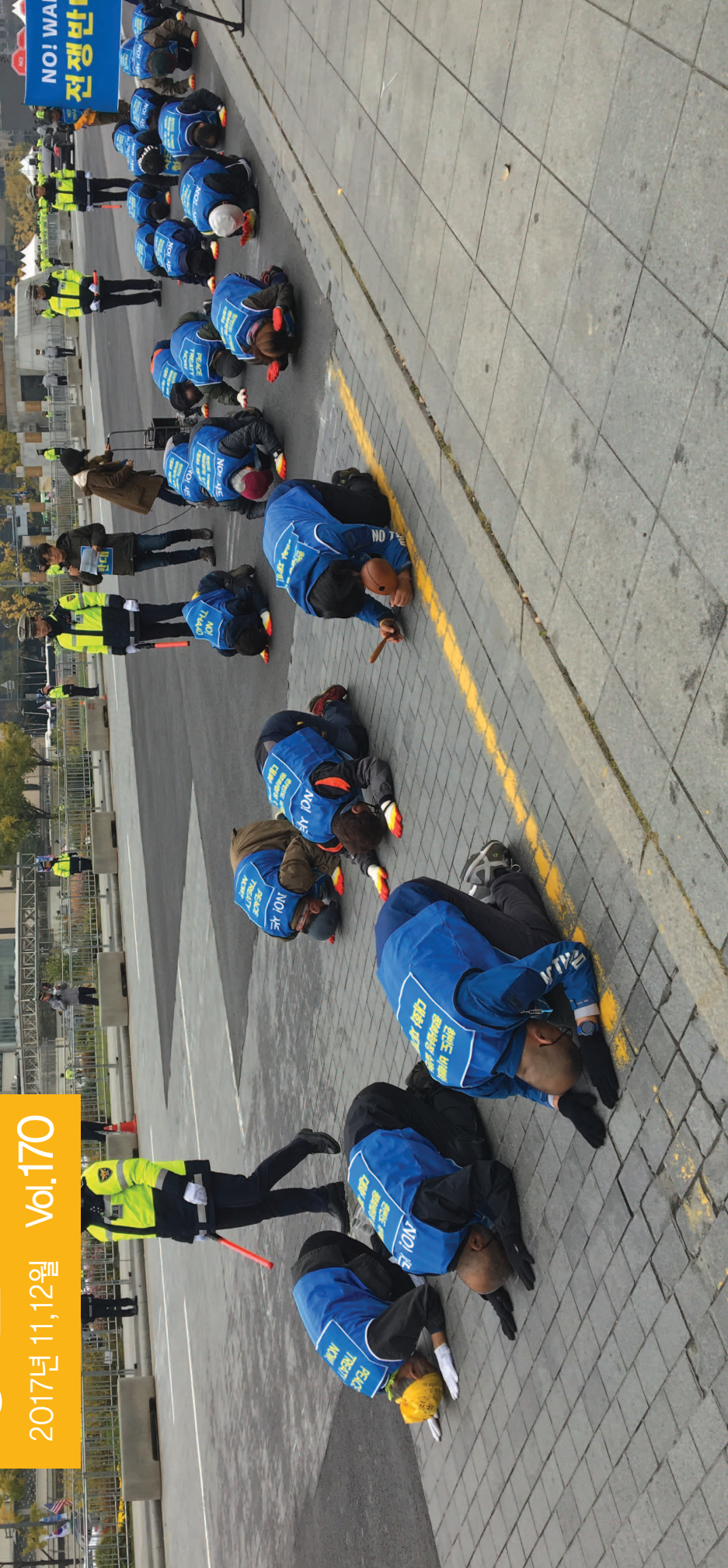
분석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트럼프를 이기는 방법

중앙소식 / 지역소식

현장

사드, 임시배치라면 공사 중단해야
미 핵잠수함 제주해군기지 입항 안된다
제주 제2공항 저지를 위해 거리에 나선...



2017년 11월~12월 통권 170호

평화누리 통일누리

트럼프 방한과 고 조영삼 열사
49재 추모일, 미대사관 앞을
지나며 사드 철회! 전쟁반대!
대화시작! 평화의 삼보일배
(사진: 오미정)



01 자료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한 한미 공동언론발표문' 규탄 논평

06 삼보일배 평화기도

- 04 삼보일배 평화기도 삼보일배 평화기도에 나서며 + 문규현
우리가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 지희준
법원의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평통사 논평

14 현안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한 평통사 논평

- 20 현장 사드, 임시배치라면 공사 중단해야 + 평화회의 입장, 이주은
미 핵잠수함 제주해군기지 입항 안된다 + 전국회의 입장, 조약골
성산 제2공항도, 강정 해군기지도 안돼 + 이주은, 김경배

27 중앙소식 평통사 워크숍, 평화통일연구소 이사회

28 분석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트럼프를 이기는 방법 + 박기학

32 지역소식 광주/전남/군산/대구/대전충청/전주/부산/인천/서울/서울남부/익산/김제

38 감사합니다 회비와 후원금(10,11월)



한반도 비핵화를 ‘제재와 압박’, ‘군사 대결적 방식’으로 달성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국민 방한 한미 공동언론발표문”을 규탄한다.

11월 8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한미 공동 언론발표문」이 발표되었다.

1 이번 「한미 공동 언론발표문」은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언급은 한마디도 없이 오로지 한미 양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 등 군사적 대결만 강조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는 방한 중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대결 수사를 누그러뜨렸다는 언론과 세간의 평가가 트럼프의 양두구육과 같은 속임수 행보를 똑바로 보지 못한 일면적, 표피적인 것임을 말해 준다.

이번 「한미 공동 언론발표문」은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에 대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밝힌 지난 6월 30일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비해서도 크게 뒷걸음친 것이다.

아울러 이번 「한미 공동 언론발표문」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밝히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 지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 지지” 등의 내용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북 제재 대상 지정 조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언급과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내용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 군사적 대결 위주의 「한미 공동 언론발표문」은 그 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 대북 초강경 공세적 주장이 전면 반영된 것으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공세를 선전 포고로 받아들이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대응과 맞물려 현재의 한반도 전쟁위기를 한층 격화시키게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우리는 조건 없는 북미, 남북대화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 「한미 공동 언론발표문」은 다음으로 “일본과의 3국 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서 “3국 간 미사일경보훈련 및 대잠수함전 훈련을 계속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으로써 한미일 통합 MD와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정책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는 ‘미국 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 약속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으로,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합의한 지 10일도 채 안 되어, 또한 싱가포르 CN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군사동맹을 부정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 이를 뒤집음으로써 또다시 대미관계에 대중관계를 복속시키고 말았다. 이로써 미국과 일본은 이른바 ‘동북아판 나토’라고 불리는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미·일·호 군사동맹과 결합시켜 미국 주도의 아태 지역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미일의 ‘인도·태평양 안보 구상’과 중국에는 나토와 연계시켜 나갈 것이다.

이 때 한미일 군사동맹을 그 ‘핵심축’(「한미 공동 언론발표문」 전문)으로 삼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사드 배치는 바로 그 출발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한미동맹의 성공적인 사드 배치” 운운한 것은 사드는 임시 배치된 것에 불과하고 환경영향평가 후 전면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던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사드 관련 주장이 얼마나 미국의 사드 배치 의도를 호도하고 사드 배치에 따른 비난을 일시적으로 모면해 보려는 기만적 주장이었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3 다음으로 한미 정상은 「한미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첨단 군사 자산의 획득과 대한
민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를 통해 한·미동맹의 방위
태세와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방
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하고자 하는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이는 F-35A 합동타격전투기,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패트리엇 PAC-3 성능 개량, AH-64 아파치 대형 공격헬기, 글로
벌호크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이지스 전투체계 등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대로 주요 미국산 프
로그램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한국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한미 정상 간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적폐세력의 미국으로부터
의 무분별한 무기 도입 관련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떠안을 것을 강제하는 것이자, 문재
인 정부는 한술 더 떠서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 요구와 함께 미국산 무기를 확대 도입하
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지난 10년간 수입한 미국산 무기는 총 36조 360억 원으로 한국의 1년 국방비와
맞먹는다. 그것도 모자라 미국산 무기를 추가 도입하겠다는 것은 대북 방어 작전 소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무기 강매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로 국내 지지도를 높여 탄핵을 모면하려는
트럼프의 장삿속과 정치적 공공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충실히 뒷받침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바로 이러한 속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조장하
고 즐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탄도미사
일 탄두 중량 해제 요구와 함께 대북 선제공격 무기 도입으로 트럼프의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
을 한껏 거들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무기체계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미국산 무기 도입을 약속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의 한
미 공동성명이나 발표문에서도 그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굴욕적인 대미 저자세
외교 행각이라는 점에서 실로 개탄스럽다.

그러나 한국이 향후 도입하겠다는 미국산 무기들은 재래식 군사력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압도
적 우위에 있어 과잉전력으로 되는 무기체계들로서 국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한
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격화시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
과 국가 이익을 전면 훼손하게 된다. 나아가 이들 무기체계는 한결같이 대북 선제공격용 전력
이자 미·일의 대중 견제와 미·일 방어를 위한 것들이다. 게다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하
기도 어려운 고성능 무기체계들이어서 한국군의 전략과 작전, 전력 운용에서 대미 군사적 종
속을 심화시킬 뿐이다.

바로 이상의 이유들로 볼 때 한미 두 정상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6, 30)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합의했던 내용이 이번 「한미 공동 언론발표문」에서는 완전히 빠지게 된 것은 어찌 보면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으로 대중 포위 작전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에까지 한국군이 동원되려면 주한미군의 전면적인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함께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는 미국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권한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핵·미사일 문제를 ‘제재와 압박’, ‘군사 대결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한 미국의 확장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 ‘작전계획 5015’ 등의 초고강도 공세 전략과 작전 수행, 이를 뒷받침하는 공세적 전력을 운용하고 이에 맞게 한국군 병력과 장비를 운용하기 위해 미국은 결코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반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 공약 또는 집권 후 조속한 환수 입장을 속절없이 포기해 버린 것이다.

이렇듯 미국의 이익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가 전면적으로 관철되고 한국의 이익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해가 철저히 배제된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미사일 문제의 해법에서 ‘제재와 압박’, ‘군사 대결적 방식’을 전면에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마냥 추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이번 「한미 공동 언론발표문」은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도 트럼프의 불법부당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평한 분담에 대한 갈망을 인정하였다(acknowledged the desire for equitable cost sharing)”는 발표 내용은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한·미 간 분담이 공정하지 못했고, 따라서 공정한 분담을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은 정당하며, 이에 차기(10차)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미집행액만 2017년 현재 무려 1조 원이 넘고, 직·간접비를 합해 한국의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비용 분담률은 80%에 육박한다. 그런데도 미국이 공평한 비용분담 운운하며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또한 「한미 공동언론발표문」은 “다가오는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분담 조치)을 통해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사드 배치 및 운용 등과 같은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되 이를 위해서 차기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관련 ‘방위비 분담 조치(defense cost-sharing measures)’를 취하기로 하였음을 뜻한다. 그러나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구실로 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는 미군 유지비(주둔비)를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는 한미 소파 5조의 위배이자, 방위비분담금은 어디까지나 주한미군 장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불법부당한 요구이다.

한국이 총건설비 107억 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 평택기지 확장에 90억불 이상을 부담한 것에 대해서 양국 정상은 주목하였다”는 「한미 공동언론발표문」 내용 또한 향후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한국의 입장보다는 방위비분담금의 총액을 늘리려는 미국의 입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잘 알려진 대로 미국이 미 2사단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한 것은 미 2사단 평택 이전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LPP 개정 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전횡이다. 그런데도 「한미 공동 언론발표문」은 미국의 관련 불법과 전횡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부당한 한국의 미 2사단 이전비용 부담을 마치 한국의 자발적인 의지인 양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미국은 평택 미군기지의 비용 분담을 전례삼아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에서 자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미군주택 임대료나 C4I 현대화 비용에 대해서도 방위비분담금의 전용을 더욱 더 당연하게 여길 것이며, 나아가 다른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도 한국의 부담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 뻔하다.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이번 「한미 공동 언론발표문」 내용은 차기 협상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기투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듯 협상 전에 미리 미국의 불법부당한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해 버린 것은 역대 이명박·박근혜 적폐 정권 하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굴욕적인 것으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도를 넘는 대미 종속적 태도에 충격을 가눌 길이 없다.

5 이와 같이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한미 공동 언론발표문」은 철두철미 트럼프의,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회담이자 협상 내용이었다. DMZ에 가서 한 시간이나 트럼프를 기다리다 되돌아오는 등 한국 대통령으로서의 자존을 내팽개친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굴욕적 자세가 모든 한미정상회담 과정과 「한미 공동 언론발표문」에 관통되어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대미 저자세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그 동안 겹겹이 쌓아 놓은 반북 대결적, 대미 종속적 적폐들을 청산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이 땅에서 자주가 움트고 평화가 숨 쉴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치욕적 결과를 규탄하며, 이 외교적 참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그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 진용의 총사퇴 및 전면 개편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 11. 9.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삼보일배 평화기도에 나서며

‘사드 반대’ 외치며 분신한 고 조영삼님 49일과 한미정상회담 앞서

상임대표 문규현 신부

“내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이것이 나라입니까?”라는 소성리 할매·할배들의 자존이 짓밟힌 절규를 뼈아프게 안고, 평화의 나라 ‘민주대한민국’, ‘온누리 평화의 희망’ 마중물이 되어 삼보일배(三步一拜)의 禱(길)을 나섭니다.

저 세월호 참살, 전대미문의 야만적으로 살해된 세월호 참사 304명 별님들의 소망으로 불타는 촛불민주 혁명의 봄으로 오는 길목엔 좋은 소식들 가득하리라 했습니다. ‘겨울 지나 봄이 오면 눈물은 씻기고 고통은 위로받으리라, 절망은 희망이 되리라’ 했습니다. 허나,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은 미국이라는 제국의 탐욕과 광기 어린 전쟁놀음으로 전운이 감돌고, 국가권력의 기본인 주권국민의 자존은 땅에 떨어지고, 민주 촛불정권은 좌표 잃은 배가 되어 미·중 간 줄타기 중에 트럼프를 국민으로 모시기에 분주한 애처로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무슨 일이 빚어질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11월 7일은 고 조영삼 선생의 49재가 되는 날입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해야 합니다”, “저의 산화가 사드 철회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방울이나마 좋은 결과의 마중물이 된다면 연연세세 가문의 큰 영광으로 알겠다”며 온 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맞아 고 조영삼 선생처럼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엎드립니다. 아니, 다시 더 힘차게 일어서고자 합니다.

아직도 세월호의 진실이 좌초된 채, 여전히 다섯 분의 희생자를 수습도 못 한 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희망촛불을 들고 안전하고 진실한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 중단 없이 가고자 합니다.

온몸 낮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사죄의 길을 갑니다. 사드 반대, 전쟁 반대,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마중물로 산화된 고 조영삼 자주·평화의 동지처럼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엎드립니다. 아니, 다시 더 힘차게 일어서고자 합니다.

미안합니다. 참으로 미안합니다. 상처 입고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을 위해 온몸 들여 기도의 길을 갑니다. 기억합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기억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성주 소성리 할매, 할배를 평화의 생명으로 기억합니다. 핵 공포 없는 세상을 꿈 꾸고 마중물이 되고자 하는 밀양 할매, 할배들과 무기와 전쟁기지 없는 평화제주를 향해 가는 제주강정주민들 그리고 평화일꾼들 모두를 기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삼보로 이기적인 탐욕과 야만적 분노 그리고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야수적 무지를 성찰하고 뉘우치고 절하며 모십니다.

우리의 제 일보는 이 땅에서 모든 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6.26 전쟁의 상흔은 아물기는커녕 더 깊고 넓게 남북을 쪼개고 있습니다. 이젠 핵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통탄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단코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며 전쟁의 모든 가능성은 차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사드를 배치하는 등 우리를 중국을 겨냥한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사드는 철거되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내세워 우리 국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떠안기려는 행보도 멈추어야 합니다. 전략자산을 동원한 전쟁연습도, 추가적인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도 반대합니다. 그 어떤 전쟁도 반대합니다.

우리의 제 이보는 가능한 빨리, 조건을 달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절실한 기도입니다.


평화를 위해 상대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려는 시도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상대는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무기가 아니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핵잠수함 도입과 같은 첨단무기를 늘여 북을 제압하려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압박과 제재에 매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 북과 미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적당히 제스처만 취하는 대화가 아니라 결과를 내기 위해 끝장을 보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 삼보는 평화협정을 실현하여 항구적인 평화를 한반도에 정착시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분단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대결의 악순환으로 같이 살아야 할 사람들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권도, 사회정의도, 진보적인 정치와 창조적인 문화도 분단의 늪에 빠진 채 허우적거리는 신세입니다.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평화협정 체결이야말로 이 나라와 온 국민이 사람답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평화협정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삼보에 전쟁과 대결, 분단을 끊어내고자 하는 성심을 담고 한 번의 절에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혼신을 다해 기어이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는 결심을 담고자 합니다.

이 평화의 기도 길에는 사드 철거를 위해 온몸 다해 나서는 소성리, 김천의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싸우는 모든 아름다운 이들의 마음과 정성이 함께 할 것입니다.

가장 낮지만 가장 위대하며 가장 느리지만 가장 위엄있는 역사적인 생명과 평화의 기도길, 이제 시작합니다.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 지희준입니다.

평화의 염원을 담아 올리는 삼보일배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미 합법적인 집회라고 승인하고 판결한 우리의 집회를 문재인 정부와 경찰권력은 불법적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로 한 칸에 고립시키고, 길바닥에 엎드린 삼보일배의 간절한 기도를 군화발로 짓밟은 저들은 “이제 다 끝났다. 트럼프가 청와대로 들어갔으니 저들이 뭐 어찌겠네!” 속으로 쾌재를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사드 잔여 발사대가 추가 반입되던 날. 그날은 오늘보다 더 심했습니다. 촛불정부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문재인 정권과 경찰들은 정말 무지막지했습니다.

“야~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구네!”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차마 끝을 알 수 없는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혔다가 이내 절망으로 곤두박질치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 때도 저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저들도 이제 포기하겠제!”

그런데, 맨 처음 소성리 주민분들이 일어서 주셨었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이제 긴 싸움을 준비하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드철회 마중물이 되겠다고 고 조영삼 열사께서 당신의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히11:5)”

열사께서는 죽음으로써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죽었으나 죽음으로써 오히려 사드철회의 마중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평화의 마중물이 되시겠다며 천주교 원불교 개신교 성직자님들께서 맨 먼저 앞장서서 삼보일배. 길바닥에 몸을 던져 기도를 바치고 계십니다. 저 큰 어른들이 나이 어린 경찰들의 발아래 엎드려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온 몸으로 기도를 바치고 계십니다. 경찰들의 군홃발에 채 이시고, 짓밟히시고 계십니다.

이러니 어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어찌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소성리 주민분들이 싸우시는 한, 그 현장에 지킴이들이 있고, 대책위가 있고, 사드를 뽑고 평화를 심고자 함께 싸우는 연대자들이 있는 한, 우리는 사드철회 마중물 고 조영삼 열사와 평화의 마중물 삼보일배의 뜻을 이어받아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어제 11월 6일, 미일 정상회담 합의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트럼프, 아베, 최대 수준의 대북압박에 완전히 합의하였다” 현 시점에서는 대북압박을 더욱 강화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서 제 개인적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 대목이 있습니다.

“일본이 자국 영공을 가로지르는 북한 능력을 차단할 능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일본의 총리가 대량의 미국 군사장비를 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아베총리도 이를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니다.

오늘 벌어지는 한미정상회담이 어떤 기조에서 진행되는지 가히 짐작하고 남은 대목입니다. 대북적대정책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한미 또한 최대수준의 대북 압박을 결의하고, 그 수단을 충족하기 위한 명분으로 또다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서 미국의 전쟁무기들을 대량으로 구입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화 있을 진저 회칠한 무덤들아”

성경의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타락한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속에서는 시체가 썩는데, 겉에는 하얗게 회칠을 하여 단장한 무덤 같은 지도자들의 기만적인 모습을 저주하셨던 겁니다. 오늘 한미일 3국의 지도자들도 마치 회칠한 무덤과 다를바 없습니다. 겉으로는 동맹이이라는 회칠을 하고, 안


보라는, 전쟁억제라는 그럴싸한 회칠을 했지만, 속으로는 이 땅의 영구적인 분단을 획책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대북 적대정책으로 평화를 위협하면서 그를 통해 전쟁을 무기를 사고파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고 위해서는 우리의 땅에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한반도를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로 가득 채우겠다는,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미 두 정상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장 대북 적대정책을 멈추십시오. 지금 당장 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하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평화협정을 시작하십시오.

작금의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벌어지는 대북 적대정책 강화와 미국산 전쟁무기 구입에 대한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살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다. 전쟁무기는 전쟁을 위한 것이지 결코 평화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미일 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전쟁무기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미국산 전쟁무기를 사들여 배치하려는 수작은 전쟁무기로 쌓아 올리는 성서의 바벨탑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 교만함과 불의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심판하셨듯이, 전쟁무기로 쌓아올리는 이 바벨탑은, 이 땅의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기필코 심판받을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연습을 하지 아니하리라”(이사야 2:4, 미가 4:3)


전쟁무기를 살 돈으로 평화의 노릇들을 놓아야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막대한 주한미군 주둔비지원금과 전쟁연습 비용으로 자주 평화 통일의 대로를 닦아가야 합니다. 내년이면 소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재개 됩니다. 말은 방위비분담금인데 결코 방위에 쓰이지 않는, 쓸데없는 용산고가차도나 건설하고, 현금으로 받아 이자놀음이나 하고,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려고 하는, 그렇잖아도 불평등한 소파협정 5조를 위반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해마다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지원금이 직·간접비를 망라 3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하여 오늘 한미 두 정상이 합의하게 될 미국 무기 수입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 돈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면 초고령사회 노인복지 해결할 수 있고, 비정규직 문제, 저출산 문제 다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듯이 주한미군에게 쏟아붓는 돈으로, 미국산 전쟁무기를 사들이는 돈으로 이 땅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 써야 합니다. 무기를 살 돈을 쳐서 평화의 길을 닦고, 소성리 골프장에 박힌 사드, 그리고 저들이 이 땅에 사들이고자 하는 SM3미사일, 핵잠수함 등 어마어마한 전쟁무기를 쳐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야합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땅 한반도에 평화의 강물이 넘쳐흐를 때 까지, 사드철회 마중물 고 조영삼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평화의 마중물 삼보일배의 정신을 이어받아 끝까지 투쟁! 

한미정상회담이 있던 날, 경찰이 금지한 평통사의 청와대 앞 집회와 행진을 법원은 허용하였다. 이어진 경찰의 항소도 법원은 기각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경호법을 들어 삼보일배 평화기도 행렬을 막아나섰다. 그러나 경호법은 '경호구역 지정'에서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경호구역도 아닌 정부종합청사 앞 길에서 삼보일배 행렬을 막았고, 그 뿐만 아니라 고착하고 결국은 한명씩 끌어내어 격리시켰다. 과정에서 수 명이 부상을 당하고 응급실에 실려가야 했다. 이와 관련 위법한 경찰의 행태를 고발하는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에 법원 판결문의 주요 내용과 평통사의 논평을 신는다.

법원의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평통사 환영 논평

1. 서울행정법원 제1부가 11월 6일 오후, 종로경찰서의 청와대 인근 집회 및 시위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평통사의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2. 평통사(신청인)는 2017. 11. 1. 종로경찰서에 2017. 11. 7. 10~22시까지 청와대 사랑채 옆 인도에서 '고 조영삼 열사 추모 및 사드배치 철회'를 개최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사랑채 옆 - 고도빌딩 - 정부종합청사 - 세종문화회관' 경로를 왕복하는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하였다.
3. 종로경찰서(피신청인)는 미 대통령 방한 관련 경호상의 위험과 해당 행진경로 및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이 높고, ▲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증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5. 이번 결정은 미 대통령 방한에 따른 경호를 위해서는 집회 및 시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경찰의 행정편의주의와 사회통념을 뛰어넘어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예외없이 인정한 값진 결정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용기있는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6. 우리는 이번 결정이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7. 11. 6.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판결문 주요 내용

-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국민들이 집회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한편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헌법재판소 2003.10.3 선고 2000헌바67 등 결정참고)
- 미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위험은 그 자체로 집시법 제 12조가 정하는 교통 소통에 대한 장애라고 보기 어렵고, 집시법 어디에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상의 필요를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금지 및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집회 및 시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자유의 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금지 통고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한다고 하여도 이는 원래 자유의 영역에 있는 집회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에 그치고, 다른 법령상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고된 장소 및 일시에서 신고된 내용대로의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제5조에서 경호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경찰)을 지정할 수 있고, 경호처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 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피신청인(경찰)이 드는 미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위험은 위와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경호구역에서의 출입통제 등 안전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 뿐이므로, 신청인으로서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내세워 위와 같은 경호상의 필요에 따른 출입금지 등 안전조치에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서의 첫번째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가 11월 28일에 있었다.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더욱 고조되고 대결이 격화되는 이 시기에, 한미 국방장관은 여전히 대결을 계속하겠다는 조치들을 내놴다.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의 각 내용들은 한국의 국방안보정책에서 핵심적 지침으로 되는 바, 이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은 각 사안에 대한 평통사의 대응 방향을 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논평 전문을 싣는다. - 편집자 주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한 평통사 논평

1 10월 28일,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개최되어 그 결과가 공동성명으로 발표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한반도 대결을 추구하는 구태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대결을 확장시키는 조치들로 일관되어 있다. 이는 작금의 한반도 전쟁위기가 가시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한국인들의 염원에 반하는 것이어서 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 먼저,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활동 중단과 포기를 촉구(3항)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활동을 중단하고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과 반대급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구태의연하다. 이로부터 우리는 한·미가 진정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특히 전략핵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으로부터 오로지 체제를 지키려는 데 있다. 따라서 미국이 대북 체제 보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북한은 결코 핵과 탄도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미국이 이에 대한 아무런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저 북한에 핵과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북한과 계속 핵대결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을 지속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4항)는 성명의 내용은 이를 반증한다.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상징이자 북한 체제 전복을 위한 물리력 행사의 가장 위협적인 리허설로, 이의 중단이야말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의 중단과 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용이 큰 방안이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3 한·미 양국이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하여 미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5항)를 증가하고 “맞춤형 억제전략(TDS)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의 실행력을 제고”(5항)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의 현 전쟁위기를 더욱 격화시키고 대북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지극히 도발적이고 공세적인 대북 작전 수행을 예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반도는 지금까지의 미 전략자산의 전개만으로도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전쟁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전쟁 불사를 도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아가 탐지→교란→파괴→방어로 이어지는 4D 작전개념은 북한의 공격 이전에, 곧 한·미의 방어 이전에 대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구실 삼아 대북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는 매우 호전적인 작전개념이다. 이런 도발적이고 공세적인 작전개념을 반복적으로 앞세우는 한·미 당국의 의도가 단지 대북 억제력 강화에 있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이는 한·미 당국의 정치군사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와 태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현 시기 한반도 전쟁위기의 한 진원지이자 언제라도 전쟁으로 비화될지 모를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한·미가 한국군의 독자적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조속히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7항)이나 “미사일 지침상 탄두 중량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로 이행키로 하였다”(7항)고 합의한 것도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해 줄 전력을 확보하려는 일환이다. 이를 위한 한·미 양국군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전력 증강, 이에 따른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경쟁의 가속화와 대결 격화, 한·미 양국의 국방예산과 한국의 미국산 무기 도입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양국의 이러한 대북 선제공격 작전개념과 전력 증강은 분명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4항)에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남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에만 발동되는, 전적으로 방어를 위한 것으로, 단연코 선제공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4 한편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사드 포대의 작전 운용 태세를 갖추도록 한 동맹의 결정을 평가”(6항)하고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 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하였다.”(6항)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의 무단적이고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면피시켜 주려는 알팍한 주장이자 “눈가리고 아웅”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우선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기도 전에 서둘러 사드를 배치한 것은 불법이었음을 고백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사드는 레이더가 가동되고 있는

등 이미 작전 운용 태세를 갖추고 있고, 항구 배치를 겨냥한 공사도 진행되고 있어 임시 배치라는 말은 사드 기지 상황과 전혀 동떨어진 표현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환경 영향평가에 따라 배치된 사드 철거에 나설 것도 아니지 않은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임시배치라는 것인가?

또한 공동성명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6항)하고 있으나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한국민들의 수많은 주장에 그 어떤 설득력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드가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6항)는 공동성명의 주장 역시 사드가 제3국(중국)을 지향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은 한·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5 또한 한·미 국방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그 어떤 북한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증진”(8항)시키기로 합의한 데 이어 한국 국방장관은 미 국방장관에게 “NLL이 지난 60여 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미 국방장관은 한국 국방장관의 입장에 존중을 표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NLL은 휴전협정이나 다른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선으로, 김영삼 정부 하에서

당시 이양호 국방장관은 국회 답변(1996년 7월)에서 “NLL은 우리가 어선의 월북을 막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한계선으로 북한에서 이를 넘어와도 정전협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이를 마치 남북 간 국경선이나 ‘영토선’으로 간주해 한·미가 북한 선박에 군사적 공격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더구나 NLL은 유엔 해양법상 북한 영해 안에 위치하고 있어 NLL 상에서의 한미연합군의 군사훈련은 북한 영해를 침범하는 것으로 되어 이 또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에 이번 공동성명이 NLL과 관련하여 “미 장관은 한 장관의 입장에 존중을 표하였다.”고 밝힌 것은 미국은 NLL에 대해 적어도 한국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6 한편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 합의의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고 “핵심 능력 획득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송영무 장관은 “조건과 시기를 고려해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까지 전환 계획을 공동 보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미의 합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 2014. 10. 24)'에 따라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와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영 등을 조건으로 하여 전작권 환수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작전권 환수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송영무 장관은 이번 회담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한다”는 의미는 그 시기를 빨리 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서 그 시간이 되게 되면 환수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결국 전작권 환수가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 계획을 공동으로 보완·발전시키기로 했다는 것은 조건 마련을 위한 일정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전작권 환수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6.30) 뒤 청와대가 전작권 환수 시기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조건이 이행되면 임기 내가 됐든 임기 후가 됐든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오마이뉴스, 7. 19)이라고 설명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결국 전작권 환수 시기는 박근혜 정권과 마찬가지로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도록 무기 연기된 셈이다.

전작권을 계속해서 미국이 행사한다는 것은 현 시기 전쟁위기처럼 한·미 군통수권자 간 대북 전쟁, 곧 군사작전 수행과 관련해 이전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 통수권자의 입장에 따

라 미국이 대북 전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막는데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미국의 대북 전쟁 수행을 위해 미군에 의한 한국군의 동원,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가능성이 한층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7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용산미군기지과 연합토지관리 계획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한 데 이어 미국 국방장관은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대해 “평택기지가 훌륭하게 조성되고 부대 이전이 원활히 진행되게 지원해 준 한측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13항)한다고 밝혔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공동성명이 밝힌 이런 내용은 이전 과정에서 양국의 합의를 무시하고 미국이 자행한 불법과 횡포, 나아가 굴욕적 한미관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한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간접 과정에서 자식을 바닷물에 떠내려 보내는 참사까지 겪으면서 이룬 옥토를 강제로 빼앗고 내쫓은 것도 모자라, 이전 비용을 미국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한·미 간 협정(LPP)을 짓밟고 우리 국민의 혈세를 빼돌려 건설한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가 바로 평택 험프리 기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불법으로 빼돌려 돈놀이하고 탈세까지 자행했지만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1조원이 훨씬 넘는 불법 전용된 자금과 3천억 원이 넘는 이자소득 환수에 대해서

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고향을 짜내기 위해 건설 기간을 10년이나 연장하면서까지 최신식 기지를 건설한 위에 최첨단 특수정보시설(SCIF)을 미국이 직접 건설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현금 지급을 보장하는 밀실 불법 합의까지 강요, 관철시킨 사실—기존의 상위협정을 위배하는 새로운 하위협정 체결로—도 최근 밝혀졌다. 나아가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캠프 험프리 가족 주택 임차료와 연간 1천억 원에 이를 사드 운영유지비도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전용해 충당하고,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우리에게 받아낼 것이다. 이에 미군기지이전 협상 초기 한국측 협상 책임자가 미군기지 이전 과정에서 미국이 “팔자를 고치려 한다”거나 “아방궁을 지으려 한다”고 비난했던 것도 모두 미국의 한국을 상대로 한 끝없는 욕심 챙기기와 이를 위해 한국의 주권이 유린당하게 될 것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의 발로였다. 그런데도 미국과 미군은 오로지 자신들만의 편의를 위해 미 대사관 및 숙소, 한미연합사, 헬기장 등 어림잡아 80만 평에 이르는 용산기지의 30%가 넘는 토지를 무단 점유함으로써 용산공원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수천억 원, 수조 원이 될지 모를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비용도 부산 캠프 하야리아 등의 경우처럼 결국 한국에 부담지를 것이다.

8 또한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ICBM과 SLBM 등을 포함한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개발이 한·미·일 3국의 안보와 번영에 위협이 된다.”고 밝히고 “미사일 경보 훈련

과 대잠전 훈련의 지속 실시”와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유 증진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14항)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합의 내용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한·미·일 통합 MD와 군사동맹을 구축함으로써 대중 포위 봉쇄 전략을 완성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서도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핵 및 ICBM 개발은 미국으로부터 자신의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심이 짝고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는 MD가 무용지물이며, 더욱이 ICBM은 한국의 안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미사일 훈련 등의 확대나 한·미·일 정보 공유와 대응 능력 강화”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 통합 MD 구축으로 미국 절대 우위의 동북아 질서를 확립하려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복무할 뿐, 한국은 미국의 대중 대결 구도에서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만 지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한·미가 이번 공동성명에서 “미 해군 함정들의 부산·진해·제주 등 한국 해군 주요 작전기지 방문을 높이 평가”(8항)한 사실을 환기하고자 한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와 오산 공군기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위한 지상군과 공군의 전략 기지라면, 제주 강정해군기지는 해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위한 미군 해군기지로 되어 가고 있다. 성주 소성리에 들어서는 사드 기지가 미·일을 겨냥한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

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미·일에 제공하기 위한 대중 정보작전의 전초기지이듯이 한반도 전체가 거대한 미국의 대중 전초기지로 전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패권 전략을 등에 업은 일본 아베 정권이 2016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성공한 데 이어 이제는 한일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베 정권이 총선 공약에 ‘한반도 유사시 주한 일본인 대피·구출 태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넣을 정도로 노골적인 한반도 군사개입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 아래 한·미·일 연합공군훈련의 가속화와 함께 한·미·일 MD 훈련, 탐색구조훈련, 차단훈련이 확대되었으며 올 4월에는 사상 최초로 한·미·일 대잠훈련이 실시되었다. 이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개입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공동성명에서 밝히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정보 공유와 대응 능력 강화를 비롯한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은 우리 스스로가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을 뒷받침해 주고 동족을 등지며 미국과 일본이 추구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대결구도에 인적·물적 자산을 송두리째 쏟아 붓는 역사와 민족에게 씻지 못할 우를 범하는 길이 될 것이다.

9 이에 우리는 이번 SCM 공동성명을 단호히 거부하며, 한반도 전쟁위기가 가시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국민과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한·미가 조건 없이 남·북, 북·미 대화를 재개하여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및 한미연합연습 중단과 북한 핵·미사일 시험을 동시에 중단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으로 통일의 디딤돌을 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0. 29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017. 12. 4 사상 최대 규모 한미공군훈련이 진행되는 것을 반대하는 미대사관 앞 평화행동. 서울뿐 아니라 훈련이 진행되는 군산, 광주에서도 피켓팅이 진행하였다. 이날 한미양국은 전투기 등 260대의 항공기를 동원하여 사실상의 대북 무력시위를 전개하였다.




사드! 임시배치라면, 공사중단해야

국방부가 11월 21일 사드 기지 내 정화조 공사 등을 강행하겠다고며 경찰 병력 5,000여명을 동원하여 주민들과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50여대의 공사차량을 부지로 반입했다.

성주 소성리 주민들과 김천 시민들, 지킴이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사드 배치 자체가 불법이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공사를 강행하는 것도 불법이기에, 정부의 공사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공사차량을 막아섰다. 새벽 5시부터 모인 주민과 지킴이 등 100여명은 오후 2시까지 온 힘을 다해 저항했다.

특히 차량과 자신의 팔을 연결하며 이종희 위원장(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과 김종경 위원장(사드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강현욱 원불교 교무(소성리 비상상황실) 등은 막무가내로 팔을 잡아당기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도 의연하게 버티며 공권력의 위법성과 사드 배치의 불법성을 밝혔다. 이종희 위원장은 "명분과 법은 우리에게 있다. 이 강토와 달마산은 우리 국토다. 미국놈들이 똥 싸고 오줌싼 게 지하수에 스며들어 그것을 우리가 먹고, 참외가 먹는다고 생각하니 미치겠다. 우리 안보에 전혀 도움 안되는 사드 반드시 막아내자"고 결의를 밝혔다. 김종경 위원장은 "사드 배치는 시작도 불법, 과정도 불법, 결과도 불법이다. 임시 배치라고 하면서 공사를 재개하는데 사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완의 상태다. 비굴하게 굴복한 결정인 사드 배치이지만, 내 나라 영토를 미군에 헌납하는 백해무익 사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아무리 공권력으로 우리 주권을 짓밟는다고 하더라도 이 땅 소성리를 미군에게 온전히 넘겨주지 않겠다"고 사드 철회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이날 남성 경찰들은 여성 주민들과 지킴이들을 밀치거나 끌어내고, 컨테이너 위에 있는 성직자들을 위험천만하게 밀치고, 주민들을 조롱하는 엉덩이춤을 추는 등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였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며 약 30명의 주민들과 지킴이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 중 4명이 가슴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결국 공사차량이 사드 기지로 반입되었지만, 주민들과 지킴이들은 결코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사드를 뺏아내고 평화를 안아오겠다는 결의집회를 마치고 서로를 격려했다. (정리 : 이주은 청년팀장) 




사드 운용 위한 공사 장비 반입 시도 중단하라!

- 사드 기지에 대규모 병력 주둔할 이유 없어
-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근거로 한 장비 가동, 기지 공사 중단해야

내일(11/21) 아침,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공사 장비와 자재가 대거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반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 반입을 위해 대규모 경찰 병력도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과 9월의 아픔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또다시 마을로 밀고 들어오는 공사 장비와 경찰을 용납할 수 없다.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한 사드 장비 가동이나 기지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 정부는 지난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후 누누이 ‘임시 배치’ 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 환경영향평가’ 를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공언했던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사드 장비 가동이나 기지 공사의 근거로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부지를 쪼개서 공여하고, 그를 바탕으로 이뤄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명백한 불법이다. 선(先)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 역시 국내법 상 명백한 위법 행위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다.

국방부는 하루 1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성주 골프장 건물에 현재 한·미 장병 400명이 생활하는 바람에 대규모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사드 장비를 가동하고 공사를 시도하며, 부지 조성도 되지 않은 곳에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는 것부터 비정상적인 일이다. 특히 한 국군이 주한미군 기지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불필요한 일이다. 최근 국방부가 현 금보상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국회 심의과정을 회피하면서 사드 배치를 지나치게 서둘러 세금 77억 원을 낭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진 것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나 책임 있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사드 가동과 병력 운용을 위해 대규모 장비 반입 작전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지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또다시 대규모 장비 반입 작전을 시행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온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장비 반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2017년 11월 20일 /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미 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 안된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오간데 없이 미 군함 입항 찾아져
제주도정, 군사기지화 막고 핵물질 반입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1. 어제(11/22)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SSN-782)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미국의 핵추진 전략자산이 제주에 입항한 것은 처음이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하던 제주해군기지가 애초 우려했던대로 미 군함도 마음대로 드나드는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인근에서의 군사훈련도 한층 강화되고 있어 제주도가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미 핵추진 전략무기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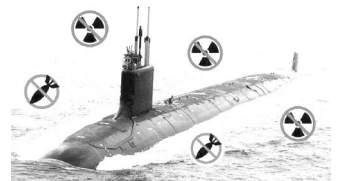
2. 그 동안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미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기지 완공 이후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소해함 등이 계속해서 강정바다로 들어오는 등 미군 기지로의 활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핵추진 잠수함까지 입항한 것이다. 올해 초에는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배치하겠다고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제안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제주남방해역에서는 한미일 군사훈련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을 겨냥하는 전초기지로 전략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3. 미 전략자산이 강정바다에 드나드는 것은 한반도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주지하듯이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전략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마다 북한 역시 무력시위로 응수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달 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압도적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으로 한반도 위기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도리어 북한의 핵무장 논리를 강화해줄 뿐이다.

4. 지금이라도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에 핵잠수함이 입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 고베의 사례처럼 조례 등을 통하여 입항하는 모든 외국의 함선은 핵물질을 탑재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비핵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핵무기를 비롯해 핵추진 전략자산의 입항을 사실상 금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주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섬이 아니라 평화의 섬, 평화의 바다로 남아야 한다. 그것이 제주의 미래와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우리는 제주가 군사기지화되는 것을 막고 비핵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7년 11월 23일 /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미 핵잠수함은
제주를 떠나라 !**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조약골 평화활동가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핵잠수함이 들어온 적도, 핵잠수함이 제주도에 폐기물을 버린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주 수요일(11.22) 제주해군기지에 들어온 미핵잠수함 미시시피호가 월요일(11.27) 빠져나갔다. 그런데 핵연료와 원자로를 탑재한 이 거대한 전함이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폐기물을 버리고 갔다. 핵잠수함과 연결돼 있던 탱크로리에서는 지금도 핵잠수함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폐수(또는 온배수)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 옆에서 잠깐 서있는데 머리가 어지럽다. 그래서 그 폐기물, 혹시라도 방사능이 검출될 수도 있으니 측정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 관공서에 문의를 했다.

제주도에는 경우가 없어서 잘 모른다고 했다. 서귀포 시청이나 해경도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지소, 제주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전화를 걸어 한 시간 정도, 여러 공무원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하나같이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소관이 아니고 검사할 장비도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 공무원 단 한 명이라도, '이거 중요한 문제이니 내가 발벗고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 내 소관이 아니지만 혹시라도 제주의 환경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다. "자기 업무가 아니니 다른 곳으로 연락해보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중.

핵잠수함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났었다. 그런데 핵잠이 머물다 나간 제주도에서는 다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는 투다. 방사능은 검사 항목이 없다거나, 폐기물과로 전화 돌리겠다는 거나, 방사능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거나,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어서 잘 모르겠으니 제주대학교에 연락해보라거나, 모두 이런 식이다. 단언컨데 제주도에는 방사능 수치를 검사할 장비도, 의지도, 인력도 없다. 그렇다면 핵전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강정마을회와 제주범대위는 제주 해군기지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열고 핵잠수함 입항을 규탄했다. (사진 : 강정마을회)



방진복을 입은 운전자가 모는 탱크로리가 해군기지에서 나왔다. 오염물질의 종류 확인도 안전조치도 없는 상황이다.



성산 제2공항도, 강정 해군기지도, 안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리의 사람들

제주 성산읍에 제2공항 추진을 막아내기 위해 상경한 제2공항반대대책위 농성장에 다녀왔습니다. 그 곳에는 2015년 11월 제2공항 계획 부지가 발표 난 이후 1인 시위를 줄곧 해왔던 김경배 제2공항반대대책위 부위원장, 강원보 집행위원장과 공동위원장, 활동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와 돌풍, 광화문 4차선 왕복 도로로 지나다니는 차량 소리가 바람소리와 뒤섞여 이야기도 잘 들리지 않았지만 농성을 하는 분들은 반갑게 평통사 식구들을 맞았습니다.

김경배 부위원장은 얼마 전 42일간의 단식을 막 마치고 보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광화문 농성을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평통사 하반기 워크샵이 있던 12월 9일, 농성이 시작되어 고권일 제주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 위원장이 워크샵을 들렀다가 하룻밤 함께 묵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청소 참 깔끔하게 해. 그렇게 강제로 청소해보기는 또 처음이네.”

강원보 공동위원장은 그렇게 말하며 고권일 위원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광화문 고층 건물 사이 바람, 모래와 먼지 등이 농성을 하는 동지들의 건강을 해칠까 두려워 대청소를 하고 갔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험난한 싸움과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애초에 절차가 잘못되었어요. 강정도 1,000명 주민 내버려 두고 80명 불러다가 찬성표 얻어서 추진한 거 아닌가요. 저희도 주민들의 동의 절차 하나도 묻지 않고 추진됐어요. 지난 적폐 정권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니 새 촛불 정부가 당선되면 당연히 바뀔 줄 알았죠. 당연히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놔야 하는 건데... 촛불정부가 이렇게 추진할 줄이야..”

김경배 부위원장이 원래 하던 일은 굴삭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건설 쪽 일이라고 합니다. 처음 1인 시위를 했을 때, 지나가던 지인이 “당신 제2공항 들어서면 좋은 거 아니요? 그러면서 1인 시위를 왜 하나.” 고 했다 합니다. 남들은 공항 들어오면 일거리 많아지고 좋지 않냐하지만 제2공항 사업이 결정되고, ‘내가 사는 집에 활주로가 들어선다니... 내가 살던 고향이 다 없어진다니’ 하는 생각에 잠도 안와서 무작정 1인 시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앞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할때에는,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다 지켜볼 수 있도록 했는데, 집에만 있으면 꼭 병이 날것만 같아 1인시위로 마음을 풀어냈다고 하네요.

지난 10년 동안 강정에서 해군기지를 막고자 한 싸움이 공군기지 싸움도 가능하게 했다고 전하며 “강정에서 온 분들이 많이 도와줘요. 강정도 제2공항이 확정되면 완전히 (전략)해군기지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여기도 함께 해주고 있어요.” 라고 전하며 농성은 오는 12월 28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때면 올해 쓰지 못한 금액이 내년에 쓰일지 아닐지 결정되는 날이라서 우선 그때까지 서울에서 농성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제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한편 김경배 부위원장은 “마음 같아서는 한강다리 올라가서 확 떨어져 죽으면 언론에서 관심 갖지 않겠나 싶은 마음도 있는데 주변 다른 위원장들이 말리네요.” 라고 했습니다. 함께 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함께 이기는 것이 중요하니 그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은, “곳곳에 많이 알려주세요. 단순합니다. 제주에 공항하나 더 생기면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봐주세요. 지금도 관광객으로 사람이 많은데 이제는 수용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 버려요. 지금 제주산이라고 얘기하는 생선들 다 거짓말이에요. 너무 오염 되서 생선이 안 잡히지 꽤 됐어요.” 라고 합니다.

주민들에게 민간 복합항이라고 말하며 강정 해군기지를 만들었고, 이제는 제2공항이라 말하며 청정 제주를 망가트리고 공군기지를 만들려는 의도. 아름다운 우리의 땅 제주를 미국의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하는 것.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발로. 어쩐지 일본의 미 해병대 기지 이와쿠니가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맑은 하늘 아래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해 사용되는 요충지 이와쿠니처럼 이제 제주도 그렇게 되는 것일까 하는 막막한 마음과 함께 절대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화를 위해, 우리의 땅이 미국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지 않기 위해, 제2공항 막아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정리 : 이주은 청년팀장)

#제주제2공항의 불편한진실


김경배 부위원장 페이스북(12.2)에서

#제주2공항 진짜 목적은 군사공항입니다. 지난 86년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 150만평 규모의 공군기지건설계획이 엄청난 제주도민의 반대로 실패하자 92년 국방부장관, 건교부장관이 민·군겸용 공항건설에 합의한 후 군사공항은 뒤에 숨겨놓고 제주에 공항이 하나더 필요하단 여론을 국토부와 제주도정이 25년전부터 끊임 없이 만들어온 겁니다. 92년에 지금의 제주공항이 혼잡했을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97년도부터는 7년마다 개정되는 국방중기계획에 제주공군기지가 빠짐없이 포함되어왔고, 2006년엔 구조탐색부대로 명칭만 바꾸며 제주도민을 속이기 위한 기만술까지 펴고 있습니다. 90만평 규모의 제주공항에도 헬기 몇 대 수송기 몇 대는 운영되고 있는데 60만평이 더 많은 150만평 부지를 확보하여 헬기 몇 대, 프로펠러 수송기 몇 대가 쓰는 구조탐색부대를 만들 리가 없고, 구조탐색부대도 공군기지이므로 언제든 제트전투기가 뜨고 내려도 막을 길이 없게됩니다. 지금의 제주공항 혼잡은 항공사마다 일정 대수 이상의 중·대형항공기를 갖추어 운영케하고 청사 승객 편의시설만 조금 더 늘려도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군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저가 항공의 소형기들을 난립하게 하여 혼잡을 조장하고 방치하여 언론 등을 동원해 제2공항 필요성을 도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올 4월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법 235조를보면 “서귀포시 소재의 국유지 일부를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도로 이양한다” 고 돼있습니다 서귀포시 관내에 대체재산이 필요한 국유지란 송악산근처 알뜨르 비행장을 얘기하는겁니다.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시대때 군공항으로 사용됐었고 지금은 활주로 길이가 짧아 제트전투기들은 이착륙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주도정은 제2공항에 공군기지 포함시켜주고 알뜨르 비행장을 넘겨받아 관광개발을 하겠다는겁니다. 그런데도 원희룡은 자기손으로 법까지 만들어놓고는 군사공항에 기만 나오면 절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올초 공군참모총장도 제주 제2공항에 공군부대를 창설할 계획이고 2018년도에 부지선정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되면 확실한 군사공항 증거가 될 것이고 엄청난 제주도민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부지선정 용역비는 내년 국방예산에 포함은 안 되어 있고 용도 불분명의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강정해군기지에서 보듯 미군이 필요하면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제주2공항 공군기지를 막아내려면 제2공항 건설 확정절차인 기본계획수립 착수를 막아내야만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예산 48억원은 예산 통과 된 지 만 1년이 지나는 이번달 28일까지 착수하지 못하면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원점 재검토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저희 성산읍대책위는 확정절차인 기본계획 착수 발표가 언제 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 있으므로 상경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주 동부는 물론 제주도민 모두의 미래가 걸린 일에 도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주 역사에 길이 남을 대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나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이만큼은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는 제주도민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6년 제주도민이 국방부를 상대로 승리했던 송악산 공군기지 투쟁처럼 제주 대 난개발과 강정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가 진짜 목적인 제2공항건설계획을 제주도민들이 분연히 일어나 막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2공항의 진짜 궁극적목 적은 미군의 전쟁 전초기지화인 걸 알면서도 제2공항 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원희룡과 이에 동조하고 있는 제주지역 출신 정치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제주의 사람과 자연을 돌이킬수없는 대재앙의 나락으로 끌고가려는 제주역사에 길이 남을 양심없는 행보들을 즉각 중단하고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입장을 표명하십시오. 진정으로 제주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 주십시오! 



평통사 하반기 워크숍

12월 9일, 대전에서 2017년 평통사 하반기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한반도 핵문제 / 평화협정과 동맹 문제 / 국방 개혁 / 평화군축과 국방예산 / 정당과 연대 문제와 관련하여 평통사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신임 연구위원들과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발표를 듣고 조별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차이점을 좁혀나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문규현 상임대표님 외 93명의 각 지역 대표와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 정기 이사회

12월 8일, 평화통일연구소 정기 이사회 및 연구위원 총회가 총정로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이사들과 연구위원들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승동 기자를 신임 감사로 결정 하는 등 내년 사업과 총회 날짜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트럼프를 이기는 방법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한국과 미국은 차기(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차기 협정은 2019년부터 적용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월 14일 방위비분담 협상 전담대사(장원삼)를 내정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공식적인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 정부가 미국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약속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든다.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있었다. 그때 한미 정상 간 주요 합의 사항 가운데 방위비분담도 포함되어 있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평한 비용분담’ 의 의미

11월 8일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공동언론 발표문'으로 줄임)에 의하면 한미 양정상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공동언론 발표문>을 보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관련 공평한 비용 분담이 바람직함을 인식하”(acknowledged the desire for equitable cost sharing of USFK)” 였다고 되어있다.

‘공평한 비용분담’이란 그동안 미국이 방위비분담 협상 때마다 한국의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해 온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한국부담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한국의 공정한 분담을 위해서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대폭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던 것이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2017.11.18)에 기고된 글이다. 원문은 아래 주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7611 - 편집자 주



이 점에서 한미 양 정상이 ‘공평한 분담에 대한 열망을 인정하였다’는 공동언론발표문은 주한 미군 주둔비용의 한·미 간 분담이 공정하지 못했고, 따라서 공정한 분담을 위해서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대폭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미국의 이른바 ‘공평한 분담’ 주장이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월 7일 한미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분담으로 한미연합태세를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한미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분담’이란 지금까지 방위비분담이 합리적 수준이 못 되었고 따라서 차기 협상에서는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분담이 되도록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도록 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이 공평한 분담 않는다는 미국의 터무니없는 주장

사실 한국이 공평한 분담(또는 합리적 분담)을 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2017년 현재 방위비분담금의 미집행액은 1조 원을 넘는다.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상 정해진 금액(가령 2014년도 9200억 원)보다 줄여서 편성한 예산(2014년 예산 7997억 원)과의 차이로 발생한 감액분 누적액 5570억 원(미국에 추후에 주어야 할 돈), 2005~2016년 사이의 불용액 1472억원,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군사건설풀비에서 축적한 현금(1조 1193억원) 중 쓰고 남아 있는 현금 3331억 원(2016년 12월말) 세 가지만 합쳐도 1조 373억원이다. 또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쳐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돈은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비의 77%에 이를 정도로 한국이 주한미군의 운영비를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이 1조원이 넘고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률이 80%에 육박한다는 것은 한국의 방위비분담이 과도한 수준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차기 협상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을 줄이는 것이 정상이고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의미하는 미국의 ‘공평한 비용분담’ 입장이 수용된 한미정상 〈공동언론발표문〉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바라는 한국의 입장은 무시되고 방위비분담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바라는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된 매우 굴욕적인 합의라 할 수 있다.

한국에 불리한 내용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한미정상 〈공동언론 발표문〉의 방위비분담 관련 내용을 보면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기존 방위비분담 구성항목에 추가하여 새로운 비용분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길을 열어놓고 있다.

〈공동언론발표문〉은 “다가오는 방위비 분담 협상 등을 통해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즉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의 지속적 강화를 방위비분담 협상과 연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영문발표문을 보면 “The two leaders intend to continue to strengthen the Alliance’ s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capabilities, including through defense cost-sharing measures in the upcoming Special Measures Agreement discussions”라고 되어있다.

‘방위비용분담 조치’(defense cost-sharing measures)란 표현은 영어발표문에만 있고 한글 발표문에는 빠져 있는데 둘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영어발표문으로 보면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강화하되 이에 필요한 비용분담을 차기 방위비분담 협상 때 논의한다는 뜻이 명확히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서울 한미정상회담 때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의 지속적 강화’의 주요한 방안으로 합의된 것이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드 체계의 배치 및 운영도 연합방위태세와 능력 강화에 속한다. 따라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은 미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나 사드체계 배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한국분담 문제를 차기 방위비분담 협상의 의제로 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 전략자산 순환 배치에 대한 방위비분담은 시설과 구역의 제공(한국 책임)을 제외하고는 주한미군의 모든 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한미소파 제5조 1항에 위배된다. 또 방위비분담은 그 대상(범위)이 주한미군의 장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도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에 방위비분담금을 지출하는 것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위배된다. 따라서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나 사드체계 운영 관련 비용은 한국이 분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그런데


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공평한 비용 분담과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 강화를 연계시킨 데 동의한 것은 어떻게든 한국에게 자신의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려는 트럼프정부에 말려든 것이자 미국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여론 수렴해 협상에 나서야

〈공동언론발표문〉에는 “양 정상은 한국이 주한미군 평택기지 확장에 90억 달러 이상을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문구도 들어 있다. 이를 두고 대다수 언론은 향후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처럼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아전인수식 평가다.

잘 알려진 대로 미국이 미 2사단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한 것은 미 2사단 평택 이전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LPP 개정 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전횡이다. 그런데도 한미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은 미국의 불법과 전횡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부당한 한국의 미 2사단 이전비용 부담을 마치 한국의 자발적인 의지인 양 평가하고 있다. 이제 미국은 평택 미군기지의 비용 분담을 전례삼아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에서 자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미군주택 임대료나 C4I 현대화 비용에 대해서도 방위비분담금의 전용을 더욱 더 당연하게 여길 것이며, 나아가 다른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도 한국의 부담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 뻔하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의 방위비분담 관련 내용은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공평한 분담에 대한 미국의 고압적인 요구, 즉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한미간 방위비분담 협상이 시작되면 방위비분담에 대한 미국의 인상요구액이 어디까지 늘어날지 실로 예측할 수 없다. 고압적인 트럼프정부의 위세에 눌려 문재인정부가 저자세를 보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가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한미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의 방위비분담 관련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트럼프정부에 맞서려면 우리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길 이외에는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회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 국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방안을 마련해 협상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광주



한미연합 공군훈련 중단 촉구 1인시위

12월 4일부터 8일까지 광주 제1전투비행단 앞에서 ‘한반도 핵대결과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연합 공군훈련 (Vigilant Ace) 중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김삼철 목사, 지희준 목사, 장현권 목사, 전경일 목사가 진행했습니다. 한미연합 공군훈련은 지금의 대결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한반도 전쟁위기와 핵 대결을 한층 더 격화시킵니다. 제재와 압박, 군사적 대결 방식으로선 결코 북한 핵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화 재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또한 평창 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한미군사연습 중단과 조건 없는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끌어 내어 지금의 한반도 전쟁위기와 핵 대결을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해남평통사 회원 모임

11월 13일(월) 오후 7시, 해남 YMCA 사무실에서 해남 회원 모임과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12명의 회원들이 참가하여 ‘트럼프 대통령 국민 향한 한미 공동 언론발표문’에 대한 평통사 논평을 읽고 토론했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이 아니라 제재와 압박, 군사적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지금의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평통사의



활동과 내용을 어떻게 대중화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의견 나눔이 있었고, 회원들이 결의를 높여 회원모임을 안정화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사드철회 투쟁을 하고 계신 소성리 분들을 위해 해남 특산물인 〈해남 고구마〉 소성리 보내기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나주평통사(준), 시민평화아카데미 열어

11월 24일(목) 오후 7시, 이레교회에서 ‘사드 배치와 한반도 평화협정’ 주제로 김강연 평통사 홍보팀장을 강사로 나주 시민평화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나주평통사(준) 이정훈 목사님과 회원, 주변 지인 등 25분이 참여 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이 집중해서 강의를 들었고, 사드에 대해 처음 듣는 일반 시민도 강의 후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나주평통사(준)은 내년에 나주평통사 결성을 위해 열심히 준비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림]

- 사드배치 철회 캠페인을 매주 목, 금 광주와 광양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광주평통사에서 11월 21일(화), 24일(금), 28일(화) 대학생 청년아카데미를 진행하였습니다.

군산



전쟁반대, 사드철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군산지역 피켓팅 참가

최근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쟁반대, 사드 철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을 군산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피켓팅을 군산평통사를 비롯한 여러 단체 회원들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침 7~8시, 오후 5~6시 출퇴근시간에 맞춰 10명 정도가 참가하여 진행하였고, 10.27에는 군산롯데마트 앞에서 캠페인과 촛불집회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권은숙, 김연태, 김판태, 서장호, 문국옥, 문정숙, 박영희, 박운옥, 신범철, 이재호 등 여러 회원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한미국방장관회담 대응 투쟁, 한미정상회담 및 고 조영삼 님 49재 등 참가

지난 10.28 국방부 앞에서 개최된 한미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과 청와대 앞 평화행동 투쟁에 박영희, 김판태 회원이 참가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연습 중단으로 북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끌어 낼 것을 촉구하고, 소성리 주민들과 함께 불법 사드 철거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11.7~8에는 트럼프 방한에 즈음하여 전쟁반대, 사드 철회, 북미 남북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투쟁과 고 조영삼 님 49재에 박원규, 김판태 회원이 참가했습니다. 정부청사 앞에서 진행된 이 날 투쟁은 법원이 합법적인 집회로 인정하여 평화롭게 삼보일배를 진행했으나 경찰들은 오히려 폭력적

으로 가로막고 우리 평화행동을 강제로 끌어내는 등 이 명박근혜 정부와 같은 반인권적 행태를 드러낸 데 대해 참가자들은 모두 분노하였습니다.

김판태 대표 국가보안법 재판 무죄 확정

2012년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조사 받고 2013년 기소된 이후 지난 5년 동안 고생했던 김판태 대표가 지난 11월 3일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여 최종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평통사의 평화협정 실현, 한미군사연습 반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등을 위한 투쟁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앞으로 더욱 힘찬 투쟁으로 자주와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애정과 관심을 모아 주신 분들, 재판준비에 힘써 주신 여러분들과 특히 조영보 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대표 김판태 |

대구



촛불 1주년집회-사드철회 홍보전

11월4일 대구백화점 광장에서 진행된 촛불 1주년집회 행사는 사드철회 홍보전과 소성리 할매들의 합창과 김천 울동마을과 천사들의 울동을 통해서 사드 철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다지는 감동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평화누리통일누리] 공부는 정수경 회원의 감독(?)아래 전 세계의 흐름속에서 사드 철거를 위한 고민들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회원들의 고민에 김찬수 대표님이 항상 함께 해 주십니다. 평화누리 통일누리 회지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회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번 11월 공부모임은 대구 사무실에서 진행되었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대구평통사가 소성리 지킴이 빠짐없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대표 김찬수 |

대전



논산 평화발자국 - 갑오농민전쟁 발자취

대전충청 평통사가 처음으로 기획하여 진행한 “논산지역 갑오농민전쟁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주제의 3회 논산계룡 평화발자국이 의미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반봉건 반외세의 가치를 들고 치열하게 싸웠던 갑오농민군의 정신을 새기고 그것이 갖는 오늘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쌀쌀한 날씨로 시작했지만 이내 풀어져 단풍이 물든 가을의 정취를 함께 느끼며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가자들이 큰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대전의 교사 출신 부모모임 8분이 참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등 모두 22명이 참가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시고, 특히 사진답사와 자료집 준비에 이어 해설로 수고해주신 조수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전충청 후원회 밤

대전충청평통사 후원회밤에 총 34명의 회원과 주위 분들이 함께한 가운데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의미있게 마쳤습니다. 시낭송과 노래 공연, 인사와 덕담, 1년의 활동을 돌아보는 활동영상, 국가보안법 무죄 확정 의미 공유하는 시간으로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즉석 연합 공연은 오늘 행사의 백미였습니다.

재능기부로 공연해 주신 김홍업, 박인자, 장명진, 김옥연, 강홍순 회원님, 음식 준비에 시낭송까지 해주신 이향숙 회원님 고맙습니다. 장도정 전 사무국장은 국가보안법 무죄 확정의 소회를 밝히면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 운영위원 유영재 |

전주



평화와 통일을 여는 나눔과 소통 한마당, 전주평화홀씨전!!!

2017.10.28.(토) 전주올리브그린에서 ‘전주평화와 통일을 여는 나눔과 소통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후원회(먹거리장터)와 나눔장터, 공연, 전시회(평화홀씨전)를 결합한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전주평통사 창립 9년 만에 처음 갖는 행사인데, 우리 모임을 지역사회에 공개한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준비위원들의 헌신과 열정은 감동을 안겨주기에 충분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뿌듯하고 알찬 행사라는 작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모로 분주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2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좋은 자리에 전주회원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1.4(토)에는 전주남문광장에서 거리평화홀씨전(평화그림 전시회)을 열었습니다. 이 또한 아름답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열린 ‘전쟁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전북도민대회’에서는 이승희 교육위원이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5분 연설을 해서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 교육부장 이재호 |



레이건 핵항공모함은 즉각 돌아가라! 매일 1인시위

10월 22~26일까지 레이건 핵항공모함 입항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미 영사관 앞과 서면 지하상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피켓을 건어차고 욕설을 퍼붓는 시민이 있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고 피켓의 내용을 읽어보는 모습에 힘을 얻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소성리' 상영-김천과 소성리 주민들과 함께

10월 18일 이석주 이장, 임순분 부녀회장을 비롯한 소성리 주민들과 입석리 주민 등 김천 주민들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된 영화 '소성리'를 보기 위해 부산을 방문하셨습니다.

부산 회원들은 주민들을 환영하고 시민들에게 사드 철폐 운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영화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며 주민들을 맞았습니다. 또 작지만 정성 어린 선물을 주민들께 전달했습니다.



14차 부산 평화발자국과 1단계 부산 평화발자국(2014~2017) 갈무리 행사

10월 22일, 1단계(2014~2017) 부산 평화발자국의 마지막 일정인 14차 평화발자국이 '미완의 민주혁명 - 6월 항쟁'이란 부제를 달고 진행되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가 6월 항쟁으로 시작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기를 바라며 당시 현장을 찾아가 그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는 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14차 평화발자국을 마친 후에는 중부교회 예배당에서 1단계 부산 평화발자국을 갈무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부산평통사는 2014년에는 '임진왜란에 맞선 부산사람들', 2015년에는 '일제에 맞선 부산사람들', 2016년에는 '전쟁에 맞서 평화를 이뤄낸 부산사람들', 올해는 '민주주의의 마중물 부산사람들'을 주제로 평화발자국을 진행했습니다.

평화발자국은 단순한 평화기행이 아니라 평통사의 또 하나의 실천영역으로서 사드철폐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실현의 길에 함께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부산은 평화의 도시로!"라는 주제 아래 일제 때부터 군사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한 부산의 면모를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는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평택과 제주, 소성리 등 미군의 군사기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이웃 도시들도 방문하고 일본 평화발자국도 발전시켜낼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인천



매주 금요일은? 인천평통사 평화행동의날!

날씨는 점점 추워지지만, 인천평통사 회원들의 평화행동은 식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청와대 앞에서 사드철폐, 한반도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병행을 위한 1인시위, 저녁에는 주안역에서 위 내용으로 1인시위와 홍보물 배포를 했습니다. 시민들은 “트럼프가 전쟁나면 한국사람이 죽지 미국은 안죽는다고 했다”며 분노했습니다. 또한, “우리 손으로 나라를 지켜야지 미국한테 맡겨선 안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등 빨리 되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회원들의 평화행동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경악! 부평미군기지 내부 맹독성 폐기물의 실체, 드디어 밝혀지다!

환경부로부터 부평미군기지 내 맹독성 폐기물인 다이옥신이 미국의 허용기준치 보다 10배나 넘게 나왔다는 정보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민사회단체는 이토록 인천땅을 오염시키고 방치한 미군을 규탄하며 지금 당장 오염물질을 미국으로 가져가고, 부평기지 반환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미군기지 내부 환경오염 결과가 발표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오염의 끝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발표 내용에 그동안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인천평통사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2017년 소성리 겨울나기와
인천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후원행사

별이 빛나는 밤
‘사드없는 소성리, 한반도에 평화를’

일시 : 2017년 12월 16일(토) 오후 6시
장소 : 구월1동성당(교육관2층)

[후원계좌] 우리 1002-588-004005 (예금주 김일익)

1부 별이 빛나는 소성리
- 피아노와 하모니카의 공연

2017년 소성리 겨울나기와 인천평통사 후원의 밤

“사드뽑고 평화심자”를 외치는 소성리 할매, 할배들의 겨울나기와 인천평통사의 활동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행사가 12월 16일(토) 오후6시, 구월1동성당 교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사드 없는 소성리, 한반도에 평화를 지원하는 청년 회원들의 피아노와 하모니카 합주공연, 사드철폐 소성리 활동 영상과 김동건 신부님의 이야기, 권정호 변호사님과 함께 평통사 국가보안법 무죄 확정 의미를 나누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식과 행사장 꾸미기 등 준비 해 주신 회원님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사무국장 유정섭 |

서울



다큐 <소성리> 영화 공동체 상영

지난 12월 5일(화), 원불교 사직교당에서 다큐 <소성리> 공동체 상영을 하였습니다. 이번 상영회는 원불교 서울 대책위원회와 서울 평통사가 함께 준비하여 진행했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에도 초청되어 비프메세나상을 수상하기도 한 <소성리>는 한평생을 성주 소성리에서 살아온 여성들의 삶을 그립니다. 평화가 별처럼 내리는 마을, 소성리가 사드 배치 이후 어떻게 주민들의 삶과 일상을 빼앗았는지를 담담하고 따뜻하게 영상에 담았습니다.

상영회 후 원불교 비상대책위의 운영은 실장이 나와 현재 소성리의 상황을 전하며 결국 사드와 공사장비가 들어갔지만 주민들의 투쟁 의지는 여전하며 수는 줄었지만 지킴이들도 계속 사드 철회 투쟁을 하고 있다며 소성리로 찾아와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대표 황윤미 |

서울 남부



한강길 걷기

11월 11일(토), 서울 남부 평통사 회원들이 한강길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일기예보와는 달리 날씨도 쾌청하고 햇살도 따뜻해서 한강길 걷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서울에 살면서도 평소 가보지 못한 곳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지어진 지 수백 년이 넘는 살 곳이 다리도 건너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16일(토)에는 성곽길 걷기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무국장 형복순 |

익산



사드 배치 철회 캠페인

10월20일, 27일 매주 금요일 오후6시부터 7시까지 익산 영등동 하나은행 앞 사드배치 철회 피켓 일인시위와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박은경 운영위원과 김유순 자문위원이 함께 해 주셨고, 익산시민들도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 사무국장 김대송 |

김제



김제 평화강연회

11월 23일 김제모임에서 '한반도 전쟁위기, 어떻게 해결하나?'를 주제로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을 초청하여 평화강연회를 열었습니다. 회원 및 지인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쟁위기 해결방안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의지를 모으고 김제 회원들이 단합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총무 황혜정 |

채미라 채일순 최경미 최경철 최기종 최기호 최미나 최미희 최병래 최병상
최 성 최신영 최양우 최 열 최영돈 최영수 최윤희 최윤덕 최진영 최진호
최치현 최희성 최희진 표경식 표영민 한강희 한명철 한상인 한창덕 한혜영
허남필 홍관희 홍광보 홍기원 홍상태 홍석주 홍석주 홍용식 홍인희 황미경
황수영 목포 벨벳교회 목포 산돌교회 목포 중앙교회 광주 큰사랑교회
용당장로교회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군산평통사

[10월] 강경덕 강인순 강임준 강정식 강혜경 고금자 고동식 고차원 권대균
김경수 김국태 김기수 김도걸 김동준 김동찬 김미주 김미진 김봉욱 김상태
김성근 김성수 김성태 김성훈 김수진 김연태 김오수 김윤철 김준근 김진환
김태순 김태철 김판태 김향덕 김향순 김형근 나신환 남대진 노명자 노승민
라귀인 마더스 문규옥 문성주 문정숙 문지영 박금자 박영희 박운옥 박원규
박정에 박종대 박종수 박현진 박형선 배형원 서경희 서동완 서일순 서장호
선진숙 손영호 송상구 신동수 신수철 양수철 양은희 엄미숙 여성구 오국진
오금수 오선환 오병철 옥경남 위양자 유미숙 유승기 유연택 유하영 이계택
이덕환 이명로 이복희 이봉희 이상현 이선희 이종인 이지운 이태영 이현주
이희정 임정원 임춘희 임홍원 장미애 전영훈 전해숙 전희남 정 란 정 민
정옥진 정창환 조경수 조규춘 조남년 조성옥 조용주 조인호 조재용 조판철
채성식 채영호 최강문 최대준 최소영 최수진 최영목 최은주 최응진 최이화
최재식 최진영 한성자 황 진 황현정 조영환 정민영 박옥현 장재순 양기만
김 진 변순영 권현숙 최남규 서지원 김정호 신유미 이재호 신훈섭 현기석
이진우

[11월] 강경덕 강인순 강임준 강정식 강혜경 고금자 고동식 고차원 권대균
김경수 김국태 김기수 김도걸 김동준 김동찬 김미주 김미진 김봉욱 김상태
김성근 김성수 김성태 김성훈 김수진 김연태 김오수 김윤철 김준근 김진환
김태순 김태철 김판태 김향덕 김향순 김형근 나신환 남대진 노명자 노승민
라귀인 마더스 문규옥 문성주 문정숙 문지영 박금자 박영희 박운옥 박원규
박정에 박종대 박종수 박현진 박형선 배형원 서경희 서동완 서일순 서장호
선진숙 손영호 송상구 신동수 신수철 양수철 양은희 엄미숙 여성구 오국진
오금수 오선환 오병철 옥경남 위양자 유미숙 유승기 유연택 유하영 이계택
이덕환 이명로 이복희 이봉희 이상현 이선희 이종인 이지운 이태영 이현주
이희정 임정원 임춘희 임홍원 장미애 전영훈 전해숙 전희남 정 란 정 민
정옥진 정창환 조경수 조규춘 조남년 조성옥 조용주 조인호 조재용 조판철
채성식 채영호 최강문 최대준 최소영 최수진 최영목 최은주 최응진 최이화
최재식 최진영 한성자 황 진 황현정 조영환 정민영 박옥현 장재순 양기만
김 진 변순영 권현숙 최남규 서지원 김정호 신유미 이재호 신훈섭 현기석
이진우

대구평통사

[10월/11월] 강기룡 강현호 강형구 고경수 고희림 곽미경 구연우 구자숙
권오혁 권재호 권주연 김기연 김기옥 김기웅 김대식 김덕기 김도은 김동수
김동열 김명환 김무영 김미란 김병길 김성임 김선희 김성순 김성태 김성혜
김수경 김승무 김영숙 김윤범 김정에 김중희 김진영 김찬수 김현택 김효남
나미숙 노영목 노익환 문현준 문혜정 박기백 박문수 박민호 박배일 박성민
박소영 박순단 박순중 박재범 박진강 박진상 박희석 박형선 배소라 배영자
배인영 서보현 서수녀 손민철 송철환 신동찬 신영도 안재철 안주연 안한수
양은숙 오신택 오창섭 오혜린 우봉진 유소희 유영대 유창열 윤병철 윤화임
이기분 이대희 이미경 이범주 이병수 이상규 이상술 이석문 이석주 이수인
이영훈 이용우 이우영 이은수 이정연 이종훈 이종원 이종식 이창우 이창주
이태광 임정균 임진우 임현정 장성태 장재호 전은희 전창훈 전호관 전희영
정명숙 정민규 정수경 정수태 정용섭 정종덕 정훈고 조규천 조유연 조정훈
조현정 주경복 차상혁 차상형 채영희 최봉태 최석인 최진영 최준식 최현정
하재철 한기영 한상옥 함수연(2개월) 허정호 허태남 홍관희

[후원/천조금] 부산베니딕토수녀원 고희림 이상술 고정에(박기백) 유지수
정수경 안현수 이창주 정인자

대전충청평통사

[10월] 강대훈 강선호 강홍순 고광성 김용수 김기수 김기현 김덕애 김도석
김동희 김미경 김미연 김상중 김선미 김성자 김영숙 김영순 김오경(2개월)
김정현 김희성(2개월) 김정호 김주호 김지수 김진양 김홍업(2개월) 김홍철
김홍수 나백주 노청래 류기형 모성진(2개월) 문성호 문양로 민성호 박병문
(2개월) 박은호 박인천 박종찬 박필규 박희인 백승혁 변혜숙(2개월) 서남철
서영희 서유나 서인식(2개월) 손정희(2개월) 송광성 송신근 송원준 신현원
신주희 신현용 신현정 심규상 심상무 심전호 심주호 안창호 오수철
오승아 오완근 오한실 원용호 유성호 유영민 유영재 유요열 유장환 유정원
유종철 유진범 윤병민 윤상열 윤대영 윤해경 윤효권 이경운 이근희 이광현
이기훈 이문행 이병구 이세준 이요한 이우근 이은정 이재우 이종영 이진 이진구
이창복 이철수 이철호 이춘자 이향숙 이현숙 이훈근 임준근
장도정 장명진 장인백 전양배 전은경 정명진 정성현 정태순 정희대 조동준

조만영 조병현 조봉문(2개월) 조부활 조성미 조영주(2개월) 조용국 조재현
조재형 조주형 최영민(2개월) 추교화 풍천교회 한상열 한용세 함필주
홍지은

[11월] 강대훈 강선호 강홍순 고광성 권길성 김기수 김기현 김덕애 김도석
김동희 김동희 김미연 김선미 김성자 김영숙 김영순 김오경 김정수
김정현 김정호 김주호 김지수 김진양 김홍업 김홍철 김홍수 나백주 노청래
류기형 모성진 문성호 문양로 민성호 박병문 박병문 박병문 박은호 박은호
박인천 박종찬 박필규 박희인 백승혁 변혜숙 변혜숙 서남철 서영희 서유나
서인식 서인식 손정희 송광성 송신근 송원준 송광은 신현원 신주희 신현용
신현정 심규상 심상무 심전호 심전호 심주호 안창호 오광영 오수철 오승아
오완근 오한실 원용호 유영민 유영재 유요열 유장환 유정원 유종철 유진범
윤병민 윤상열 윤대영 윤해경 윤효권 이경운 이광현 이기훈 이기훈 이문행
이문행 이범구 이세준 이요한 이우근 이은정 이재우 이종영 이진 이진구
이창복 이철수 이철호 이춘자 이향숙 이현숙 이훈근 임준근 장도정 장명진
장인백 전양배 전은경 전해연 전해연 정명진 정창석 정창석 정태순 정희대
조동준 조병현 조봉문 조부활 조성미 조영주 조용국 조재현 조재형 조재형
조주형 최영민 추교화 한상열 한용세 함필주 홍지은

보령평통사

[10월] 고미숙 권기석 권순현 권진복 김영석 김은수 김홍성 김진수 백용기
상형규 서순희 송미영 신현영 안학수 오무광 우장식 이덕표 이용우 이재문
이정학 이종협 이학연 추동진

[11월] 고미숙 권기석 권순현 권진복 김영석 김은수 김홍성 김진수 백용기
상형규 서순희 송미영 신현영 안학수 오무광 우장식 이덕표 이용우 이재문
이정학 이종협 이학연 추동진

부천평통사

[10월] 강용환 구광숙 구자춘 구현모 김경남 김덕근 김덕희 김동오 김성근
김성용 김성애 김성훈 김숙희 김애연 김영준 김홍상 김현식 김인영 김정은
김정훈 김주영 김지숙 김현경 김현주 노은하 노형욱 문은정 민경진 박성진
박숙경 박영민 박인호 배영미 변승기 변은주 사이화 서순복 서혜숙 석의정
성명은 손무수 손종욱 송기부 송봉훈 신용철 신정길 심영섭 양남영 오옥남
유승우 유원희 윤용환 이규환 이병훈 이보영 이숙주 이숙자 이영아 이영재
이영미 이정규 이종주 이준호 이현구 이혜련 이홍남 임숙영 임현숙 장인옥
장해영 전윤미 전선화 정승숙 정승현 정용진 정윤희 정인호 정현희 정희목
조기대 조민우 조숙희 주명숙 주영일 주옥현 주정숙 지상철 지은희 지태봉
천소향 최성희 최영미 최희준 허인영 허호인 현지환 홍봉현 황영신 황영희
[11월] 강용환 구광숙 구자춘 구현모 김덕근 김덕희 김동오 김미영 김성근
김성애 김성훈 김숙희 김영준 김홍상 김현식 김인영 김정은 김정훈
김주영 김지숙 김현경 김현주 노은하 노형욱 문은정 민경진 박성진 박숙경
박영민 박영자 박인호 배영미 변승기 사이화 서순복 서혜숙 석의정 손무수
손종욱 송기부 송봉훈 신용철 신정길 심영섭 양남영 오옥남 유승우 윤용환
이규환 이병훈 이보영 이숙주 이숙자 이영아 이영재 이은영 이정규 이종주
이준호 이현구 이현주 이홍남 임숙영 임현숙 장인옥 장해영 전윤미 정근수
정선화 정승숙 정승현 정용진 정윤희 정인호 정현희 정희목 조기대 조민우
조숙희 주명숙 주영일 주옥현 주정숙 지상철 지은희 지태봉 천소향 최성희
최영미 최정규 최희준 허호인 현지환 홍봉현 황영신 황영희

부산평통사

[10월] 강문수 강정아 계숙경 광광덕 광병철 광상진 권창훈 권철호 김강임
김건우 김광수 김광식 김규연 김기래 김나영 김남기 김서윤 김수환 김영수
김영자 김요아킴 김용판 김옥 김유순 김유중 김은성 김은자 김재연 김점선
김정혜 김창호 김하원 김해영 김현봉 김현주 김현호 김형열 김해경 김호기
김홍술 김훈규 남승우 남원철 남정희 남태호 도라지 문배수 문은경 박광선
박교원 박동일 박석분 박성용 박성호 박수경 박수분 박수진 박숙자 박영
박인숙 박정에 박정하 박종대 박종순 박진태 박 철 박희동 방영식 서경혜
서금성 서기범 석혜선 설정희 성은하 손그레시 손기종 신승태 신자범
신나영 심창진 안재덕 안중덕 안진숙 양윤정 양진철 양하니 엄귀현 여승철
우수경 원무현 유성일 윤상영 윤해정 이경호 이광표 이덕순 이명옥 이미현
이병로 이상남 이상철 이수정 이월신 이우영 이의옥 이인순 이정선 이정숙
이종영 이종숙 이진호 이태산 이화진 이학진 임상민 임상우 장효복 전기호
전나미 정계영 정대화 정명선 정봉실 정방은 정원옥 정윤희 정의대 정의현
정재양 정혜경 조경주 조봉준 조보교파 진병만 차성호 채희환 최귀화
최무덕 최병학 최영현 최홍호 최은주 최종대 최형록 하지림 한기양 한석문
황구화 황동진 황선희 황영주 황철환 (후원) 김순호

[11월] 강문수 강정아 계숙경 광광덕 광병철 광상진 권창훈 권철호 김강임
김건우 김광수 김광식 김규연 김기래 김나영 김남기 김서윤 김수환 김영수
김영자 김요아킴 김용판 김옥 김유순 김유중 김은성 김은자 김재연 김점선
김정혜 김창호 김하원 김해영 김현봉 김현주 김현호 김형열 김해경 김호기
김홍술 김훈규 남승우 남원철 남정희 남태호 도라지 문배수 문은경 박광선

박교원 박동일 박석분 박성웅 박성호 박수경 박수분 박수진 박승자 박 영
박인순 박정애 박정하 박종대 박중순 박진태 박철 박희동 방영식 서경혜
서금선 서기범 석현철 설정희 성은화 손그레이스 손기중 신승태 신자범
심나영 심창진 안재억 안종덕 안진숙 양윤정 양진철 양하니 엄귀현 여승철
우수경 원두원 유성일 윤상영 윤혜정 이경호 이광표 이덕순 이명옥 이미현
이병로 이상남 이상철 이수정 이월신 이우영 이의용 이인순 이정선 이정숙
이종명 이종숙 이진호 이태산 이화진 이학진 임상민 임상우 장호봉 전기호
전나미 정계영 정대하 정명선 정봉실 정쌍은 정원옥 정유희 정의태 정의현
정재양 정혜경 조경주 조병준 조보고파 진병찬 차성호 채희완 최귀화
최무덕 최병학 최영혁 최용호 최은주 최종태 최형록 하지림 한기양 한석문
황구화 황동진 황선희 황영주 황철환 (후원) 김순호

서울평통사/서울남부 평통사

[10월] 강대준 강수해 강양원 강영옥 강윤미 강효석(2개월) 고광호 고연주
공동길 권원호 구수영 구자숙 권남근(2개월) 권순형 권영무 권제세 권혁문
권해인(2개월) 김각영 김경자 김경자 김경호 김경훈 김관철 김규태(2개월)
김균열(2개월) 김기수 김기수 김동훈 김두리 김두산 김명선 김미경
김미령 김미영 김민재 김보경 김복녀 김성태 김새론 김석균 김석민 김선희
김성연 김성연 김숙자 김안순 김연옥 김영리 김영모 김영애 김영재 김영진
김영진 김영철 김운성 김원봉 김유석 김유하 김은미 김은미 김일수 김재훈
김정미 김경자 김정현 김종일 김종희 김중환 김중환 김지수 김진환 김중래
김태준 김기규 김한성 김향자 김현진 김화순 김후중(2개월) 김희규 김희영
김희현 나영훈 나현대 남미영 남택우 노은아 도임방주 류시자 류은숙
림구호 맹봉학 문봉모 문수정 문인근 문정화 민윤혜경 박경혜 박덕진
박명숙 박병관 박봉희 박상호(2개월) 박종민 박진옥 박진희 박찬주 박해철
박후임 박희성 방만식 배기봉 배소영 배주희 배춘실 변순영 변연식 서보혁
서예원(2개월) 서유미 서인규 서정래 서정호 서진희 서창식 선소진 선순단
선부한(2개월) 손수영 손영일 손우정 손윤희 손정목 송무호 송상호 송상환
신동욱 신영철 신재현 신재훈 안건모 안병순 안희옥 양금순 양덕춘 양민석
양순주 양원진 여혜숙 연선민 오경혜 오기성 오미정 오지연 오대경 오혜경
오혜숙 우문명 우미정 우성란 위선남 유영철 유종석 윤근식 윤동현 윤영일
윤영진 윤재영 윤정원 윤호상 은종복 이경목 이경아 이경희 이경희 이광숙
이광중 이기묘 이동주 이두우 이병일 이병은(2개월) 이상미 이상재 이상진
이선옥 이선재 이성형 이수정 이형수 이수철 이순혁 이숙규 이숙우 이아름
이애용 이영옥 이 윤 이윤영 이재필 이정삼 이정숙 이정숙 이창호 이현준
이혜경 이혜진 박승철 이화정(2개월) 임동원 임미경 임보라 임선화 임수아
임순례 임인식 임창혁 임진영 임태환 임호일 장기준 장남희 장성식 장정우
장진영 전성표 전현우(2개월) 정광진 정경숙 정상현 정소연 정원진
정준영 정지현 정호준 조계성 조영희 조정현 조창현 조현우 지미자(2개월)
진유식 진태준 채근식 채운석 최대욱 최정원 최영환 최향숙 한기환 한문덕
한성규 한상옥 한선영 한준형 한현식 현동식(2개월) 형복순 홍기정 홍영의
홍창의 홍희덕 황덕호 황 완 황윤미 황철우 (후원) 거자씨교회

[11월] 강대준 강수해 강양원 강영옥 강윤미 강효석(2개월) 고광호 고연주
공동길 권원호 구자숙 권남근(2개월) 권순걸(2개월) 권순형 권창희 권제세
권혁문 김각영 김경자 김경자 김경호 김경훈 김관철 김규태(2개월) 김균열
김기수(2개월) 김동훈 김두리 김두산 김명선 김영일 김미경 김미령 김미영
김민재 김복녀 김성태 김새론 김석균 김석민 김선희 김숙자 김안순
김연옥 김영규 김영리 김영모 김영애(2개월) 김영재 김영진 김영진 김운성
(2개월) 김원봉 김유석 김유하 김은미 김은미 김은아 김일수 김재훈 김정미
김경자 김경현 김종일 김중희 김중환 김지수 김진환 김중래 김태준 김한규
김한성 김향자 김현진 김화순 김후중(2개월) 김희규 김희영 김희현 나현대
나혜영(2개월) 남택우 노은아 도임방주 류미아 류은숙 림구호 문봉모
문수정 문건우 문정화 문희경 박경혜 박덕진 박명숙 박병관 박상호 박연미
박영희 박영희 박은봉 박종기 박종양 박종열 박종민 박진옥 박진희 박찬주
박해철 박후임 박희성 방만식 배기봉 배주희 배춘실 변순영 변연식 서보혁
서영미(2개월) 서예원 서유미 서인규 서정래 서정호 서진희 서창식 선소진
선순단 손수영 손영일 손우정 손정목 송금식 송무호 송상호 송상환 신동욱
신영철 신재현 신재훈 안건모 안병순 안희옥 양계택(2개월) 양금순 양덕춘
양민석 여혜숙 연선민 오경혜 오미정 오지연 오대경 오혜경 오혜숙 우문명
우문명 우문영 유종석 윤근식 윤동현 윤영진 윤성우 윤승하 윤영선 윤화식 최장수
윤호상(2개월) 은종복 이경목 이경희 이경희 이광숙 이광중 이기묘 이돈성
(2개월) 이동주 이두우 이병일 이경은 이상미 이상재 이상진 이선옥 이선재
이수연(2개월) 이수정 이형수 이숙희 이숙희 이숙희 이숙희 이인기 이옥희 이용수
이용우 이용성 이은지 이은희 이은희 이재술 이재우 이창옥 이창옥 이정희
이종민 이종철 이준걸 이창근 이현직 이춘식 이태현 이현구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혜경 이혜정 이화정 인수봉 임경희 임동렬 임재훈 임희호 장광수
장귀숙 장동훈 장세운 전학규 정명택 정명숙 정미자 정승호 오수정 정유성
정해인 정현숙 정형식 정희진 조경숙 조남순 조봉규 조성래 조성래 조용수
조인휘 주윤택 지현민 지형철 이재철 최리주 최복래 최순규 최 왕 최 웅
최정옥 최정임 최종학 최준배 최지수 최현숙 추승만 추영호 하경자 하태준
한만술 한상옥 한성원 한신복 한연숙 한연숙 한연숙 한연숙 한현진 한희권
허란 허문예 허문예 허중 허필자 홍희기 황인철 황현숙

한현실 한호석(2개월) 현동식 형복순 홍기정 홍영의 홍창의 홍희덕 황덕호
황 완 황윤미 황철우 (후원) 거자씨교회

안동평통사

[10월] 고정희 권기춘 권영근 권영희 권주원 김대현 김동원 김두년 김병상
김석현 김순자 김영순 김예숙 김인숙 김재권 김종렬 김재현 김희배 마명락
민현주 박재근 박종익 손도숙 손현목 신광진 신성일 여상화 오덕훈 윤지홍
이경재 이매우 이성로 이태환 이혜선 장세길 정복순 조규천(2개월) 조병재
조석옥 조선아 조영준 조준래(2개월) 최난희 최형식 한영선 강석주 김수동
김정석 김정희 김주철 김지선 김판갑 김현택 박무식 박용재 박종규 배용환
유준우 윤 창 이병현 이창 한철희

익산평통사

[10월] 강익현 고은순 김대송 김미경 김순덕 김양용 김원수 김은진 김종화
김창수 김현숙 김희진 노영래 박두식 박영천 박용호 박용호 박은경 박지영
박창신 배병옥 백낙진 백선영 서용 소병직 송동한 신귀백 신항우
심경희 안영목 안 준 안현석 오기주 유재동 유진우 유희택 이근수 이문선
이병식 이보미(2개월) 이복순 이석근(2개월) 이은경 이장우 이정철 이종민
이종구 이진규 이혜경 이현숙 이화춘 임탁균 장중수 전미영 전호정 정수진
정운송 정용송 조정권 채미진 채운석 최민우 최영미 최인규 최재철 하춘자
허명석 허정길 황영하 황의성 황인철

인천평통사

[10월] 강명선 강영규 강원희 강인석 강정민 강한일 고상혁 고영남 공계진
곽준경 구동훈 권오승 권창식 김갑봉 김경민 김금옥 김도을 김동근 김명중
김문경 김미경 김민정 김병철 김보희 김희경 김봉은 김상기 김선경 이주은
김선미 최현호 김성기 김성태 김소희 김숙희 김시완 김영순 김오섭 김우경
김윤석 김윤조 김은숙 김의숙 김일희 김경녀 김경자 김경하 김중갑 김중운
김중호 김주숙 김중찬 김중현 김지훈 김현식 김현진 김희숙 남익현
류미애 문병호 문선희 문한나 이은순 박경림 박광선 박광식 박달수 박명옥
박미정 박병석 박순길 박순덕 박순이 박순주 박영민 박용희 박원재 박유순
박인호 박점수 박정윤 박 진 박창현 박현우 박해진 박용수 백은정 서경호
서달원 서덕용 서영선 서재훈 소병목 손선재 손정민 손현철 송경명 송금화
송재철 송정로 송현식 김민서 신동훈 신용준 신윤례 신희철 심옥빈 심이섭
심자섭 심재환 안용원 양승조 여영석 오종훈 오창근 오혜영 원 웅 유근석
유성규 유정희 유한경 유현선 윤성우 윤승하 윤영선 윤인준 윤화식 최장수
이대준 이덕례 이동현 이만재 이무섭 이무용 이미경 이범철 권오승 이석기
이성로 이상은 이성희 이세구 이숙희 이숙희 이숙희 이인기 이옥희 이용수
이용우 이용성 이은지 이은희 이은희 이재술 이재우 이창옥 이창옥 이정희
이종민 이종철 이준걸 이창근 이현직 이춘식 이태현 이현구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혜경 이혜정 이화정 인수봉 임경희 임동렬 임재훈 임희호 장광수
장귀숙 장동훈 장세운 전학규 정명택 정명숙 정미자 정승호 오수정 정유성
정해인 정현숙 정형식 정희진 조경숙 조남순 조봉규 조성래 조성래 조용수
조인휘 주윤택 지현민 지형철 이재철 최리주 최복래 최순규 최 왕 최 웅
최정옥 최정임 최종학 최준배 최지수 최현숙 추승만 추영호 하경자 하태준
한만술 한상옥 한성원 한신복 한연숙 한연숙 한연숙 한연숙 한현진 한희권
허란 허문예 허문예 허중 허필자 홍희기 황인철 황현숙

박현주 박해진 백승우 백은정 서경태 서달원 서덕용 서영선 서재훈 석영수 소병욱 손선재 손정민 손현철 송경평 송재철 송한석 김민서 신용준 신윤례 신희철 심신아 심옥빈 심자섭 심재환 안용원 양승조 여영석 오미경 오준준 오창근 오혜영 원웅 유근석 유성국 유정섭 유정희 유한경 유현섭 윤성우 윤송하 윤인중 윤화심 최창준 이대준 이덕례 이동현 이만재 이무섭 이무용 이미경 이범철 권오승 이석기 이성로 이성은 이성희 이세구 이숙희 이승천 이안기 이옥희 이용수 이용우 이우성 이은희 이용하 이재술 이재우 이정욱 이정욱 이정희 이종민 이종철 이준걸 이창근 이천직 이춘식 이태현 이해민 이현구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해경 이해정 이화정 인수범 임경희 임동렬 임재훈 임희로 장광수 장귀숙 장동훈 장세윤 전학구 정명락 정미자 정승호 오수정 정유성 정해민 정현숙 정형서 정희진 조경숙 조남순 조병규 조성래 조성재 조용수 조인휘 조재호 주용택 지현민 지형철 진재환 최복례 최순규 최 광 최 웅 최정욱 최정임 최정민 최준배 최현숙 추승안 추영호 하경자 하태준 한만송 한상욱 한상원 한신복 한영순 한정수 한현진 한현희 한희권 허란 허중 허필자 홍 중 홍학기 황인철 황현숙

전주평통사

[10월] 조미송 김미현 고영철 엄경희 임애림 이성환 최명숙 이상빈 전형석 심 훈 최인규 박수배 한상기 손경원 최재훈 김윤수 김희찬 박미영 전상호 송주섭 이완순 한근수 국유호 원명재 임용진 이재호 이수원 서승 김정임 백승환 박기순 길성환 정기철 문아경 송기춘 서은숙 이형구 김병선 신선화 송호영 임익근 광동순 조정현 최용기 김진성 황재현 채주병 송미영 봉형근 김주진 김은자 이동백 정기동 김은자 국산 고이석 허만승 박우성 최금희 권동용 정종철 고차원 유영진 김승철 노재화 이동주 정형용 김여진 김효숙 장정우 양경자 방용순 이기환 백해영 최정욱 조경희 이기봉 최명호 민혜경 김재병 심병호 김홍만 이재호 이승희 서경희 이옥희 이석영 국주영은 김영호 전주향린교회

[11월] 강대권 고내희 고영철 고이석 고차원 광동순 국산 국유호 권동용 길성환 김미란 김미현 김병선 김여진 김윤수 김은자 김재병 김정임 김주진 김진성 김충만 김태순 김효숙 노재화 문아경 민혜경 박기순 박미영 박수배 방용순 배은기(2개월) 백승환 백해영 봉형근 서경희 서광호(2개월) 서승 서은숙 손경원 송기춘 송미영 송주섭 송호영 신귀희 신선화 심병호 심훈 양경자 엄경희 원명재 유영진 윤현주 이기봉 이기환 이동백 이동주 이상빈 이송철 이수원 이승희 이완순 이재호 이형구 임애림 임용진 임익근 장정우 장종철 전상호 전형석 정기동 정기철 정형용 조경희 조미송 조정현 채주병 최금희 최명숙 최명호 최용기 최인규 최재훈 하재호 한근수 한상기 허만승 현금순

성남용인평통사(준)

[10월] 김중국 김준기 김춘식(2개월) 김표무 노병돈 박종완 서덕석 심재상 원형석 이순선 이용위 이재범 장미라 정선희 정자혜 지경필 최병철 하성주 [11월] 김중국 김준기 김춘식 김표무 노병돈 박종완 서덕석 심재상 원형석 이석주 이순선 이용위 이재범 장미라 정선희 정자혜 지경필 최병철 하성주 허남해(2개월)

김제 지역 회원

[10월] 강병진 강용욱 권태정 김성순 김영미 김영하 김정환 김진원 김형에 나인권 나현균 남궁윤 남성훈 노경두 노규석 박기주 박원용 박흥식 방원필 배영술 배준식 소광석 손은하 안지영 안진상 오인근 유성룡 유재홍 이병철 이용만 이은경 이현승 장경태 장덕상 전미영 전철수 정현문 정형국 하기호 하성애 김창수 박영배 김청훈 이희곤 소귀자 문상봉 홍복사 이경아 허재우 조경희 양재식 이우관 김형기 나준이 이경룡 정용희 정진국 문병선 [11월] 강병진 강용욱 권태정 김성순 김영미 김영하 김정환 김진원 김형에 나인권 나현균 남궁윤 남성훈 노경두 노규석 박기주 박원용 박흥식 방원필 배영술 배준식 소광석 손은하 안지영 안진상 오인근 유성룡 유재홍 이병철 이용만 이은경 이현승 장경태 장덕상 전미영 전철수 정현문 정형국 하기호 하성애 김창수 박영배 김청훈 이희곤 소귀자 문상봉 홍복사 이경아 허재우 조경희 양재식 이우관 김형기 나준이 이경룡 정용희 정진국 문병선

마산창원진해 지역 회원

[10월] 공명탁 김봉현 김순희 김용환 김윤자 김지영 문상환 박승일 신경희 신윤혜 여영국 윤소영 윤종근 이상익 이우섭 조광호 조형태 차정인 [11월] 공명탁 김봉현 김순희 김용환 김윤자 김지영 문상환 박승일 신경희 신근숙 여영국 윤소영 윤종근 이상익 이우섭 조광호

평택경기지역 회원

[10월] 강경남 권오일 권차랑 김교원 김민수 김상용 김상철 김성환 김영호 김용표 김주성 김준기 김택균 도영호 민선임 박성철 서맹섭 손영인 신종원 심우근 연창호 염형만 오영미 윤선호 이가영 이경수(2개월) 이민재 이수용 이수정 이양진 이진희 이해준 장경란 정인교 조명심 조재길 조창형

차지아룬와라판 최신헌(2개월) 추영배 한동수 한민규 한상균 한상진 현호현 황명선 황재순

[11월] 강경남 권오일 권차랑 김교원 김민수(2개월) 김상용 김상철 김성환 김영호 김용표 김주성 김준기 김택균 도영호 민선임 박성철 서맹섭 손영인 신종원 심우근 연창호 염형만 오영미 윤선호 이가영 이경수 이수용 이수정 이양진 이진희 이해준 장경란 정인교 조명심 조재길 조창형 차지아룬와라판 최신헌 추영배 한동수 한민규 한상균 한상진 현호현 황명선 황재순

제주 지역 회원

[10월] 강호진 고권일 고훈 권형우 김경훈(2개월) 김광중 김동원 김성규 김옥춘 김중환 문무병 문배수 방은미 양윤호 오명애 오상진 오주연 이정훈 정영주

[11월] 고권일 권형우 김경훈(2개월) 김동원(2개월) 김성규 김옥춘 김중환 문무병 문배수 방은미 양윤호 오명애 오상진 오주연 이정훈 정영주

강원지역 회원

[10월] 김영남 김주목 민원식 박수영 이진석

[11월] 김영남 김주목 민원식 이진석

평화통일연구소

[10월] [이사회비] 강정구 김경호 김영환 노재열 박진석 송기춘 신정길 이정학 임승계 조현정 [특별회비] 김지영

[후원회비] 강진희 김미령 류승화 민경숙 박복희 이미정 이범준 이선엽 이왕재 정향란 조미향 한양재 한혜영

[11월] [이사회비] 조현정 강정구 김경호 김영환 노재열 박진석 송기춘 신정길 오동석 이정학 홍영진 [후원회비] 강진희 김미령 류승화 박복희 민경숙 이미정 이선엽 이왕재 정향란 조미향 한양재 한혜영

* 회비 납부 문의 : 각 지역 평통사 사무국과 중앙 사무처

고맙습니다~~

문규현 상임대표님, 김일희 인천대표님(구월1동성당), 윤송하 회원 어머니, 김강연 홍보팀장 어머니, 시흥 이병훈 목사님이 김장 김치를 사무실로 보내주셨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

순천 오옥목 대표님, 강진 장귀영 회원님, 보령 김영석 대표님, 인천 이우성 청년부장 할머니님이 쌀을 보내주셨습니다. 겨울 양식 든든합니다. ^^

소성리 임순분 부녀회장님이 대봉감을, 보령 김영석 대표님이 대봉감을, 대구 김00 회원님이 단감을, 안동 이매우 회원님이 사과를, 나주 마대중 회원님이 배를, 대구 회원들이 통영 귤을, 서울 한상기 회원님이 귤과 햅쌀을 세트들, 조현정 목사님이 초콜렛과 견과류를, 서울 강수혜 회원님이 배김자랑과 들깨죽을 사무실로 보내주셨습니다.



중앙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계좌번호 : 농협 539-01-145822 문규현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연 락 처 : 02) 712-8443 spark946@hanmail.net

서울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3-21-0339-741 서영석
연 락 처 : 02) 713-1992 seoul-spark@hanmail.net

서울남부평통사

연 락 처 : 010-9780-7139 형복순

부천평통사

주 소 : 14572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90번길 46 2층
계좌번호 : 국민은행 314802-04-004244 주정숙
연 락 처 : 032) 671-7179 bcspark0601@hanmail.net

인천평통사

주 소 : 22156 인천시 남구 주안동 608-5번지 201호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588-004005 김일회
연 락 처 : 032) 428-2230 icspark523@hanmail.net

대전충청평통사

주 소 : 34623 대전 동구 대전로867번길 한밭오피스텔 901호
계좌번호 : 하나은행 647-910051-38305 유영재
연 락 처 : 042) 635-5812 dcspark925@hanmail.net

보령평통사

연 락 처 : 010-2292-7883 김영석

익산평통사

주 소 : 54542 전북 익산시 고봉로36길 9-2
계좌번호 : 농협 514-12-028901 김대송
연 락 처 : 063) 832-0018 king208208208@hanmail.net

군산평통사

주 소 : 54077 전북 군산시 백룡안4길 6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4-21-0892-744 김판태
연 락 처 : 010-8860-2230 김판태

전주평통사

주 소 : 54954 전북 전주시 완수구 전통로 38
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506-01-323911 이승희
연 락 처 : 010-8283-4371 국산

광주평통사

주 소 : 61245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43길 광주YWCA 605호
계좌번호 : 광주은행 169-107-165626 정동석
연 락 처 : 010-5610-5230 정동석 kj-spark@hanmail.net

순천평통사

연 락 처 : 010-4623-6906 김용재

광양평통사

연 락 처 : 010-3022-0452 서광석

안동평통사

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733-02-360613 김현택
연 락 처 : 010-4312-3939 조한웅

대구평통사

주 소 : 41919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계좌번호 : 대구은행 076-13-161229 대구평통사
연 락 처 : 053) 428-0727 dgspark@hanmail.net

부산평통사

계좌번호 : 부산은행 062-12-007493-0 김건우
연 락 처 : 070-7809-4311 bsspark@hanmail.net

성남용인평통사(준)

연 락 처 : 010-2462-1377 서덕석
계좌번호 : 농협 351-0959-1481-63 서덕석

해남 010-5612-8125 박승규

무안 010-3645-2722 문영란

김제 010-9957-7478 손은하

목포 010-5610-5230 정동석

나주 010-3602-1849 이정훈

마산창원진해 010-2674-8510 김용환



상임대표 문규현 **공동대표** 고영대 문홍주 변연식 서창호 이일영 임종철 이천우 박상희 김병균

감 사 김광열 **문예위원장** 문홍주 **지도위원** 배종렬 노정선 명 진 박순희 조주형

자문변호사 권정호 김형태 이남진 장경옥

발행일 2017년 12월 15일 **발행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발행인** 문규현

주 소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 (충정로3가) 2층 **전 화** (02)711-7292, (02)712-8443 **팩 스** (02)712-8445

홈페이지 www.peaceone.org **전자우편** spark946@hanmail.net **후원계좌**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록번호 서울라 10482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03년 10월 9일